

19th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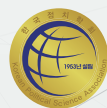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일시 2025년 4월 10일(목) 09:30~17:30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220동 204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참가 등록 및 개회식

09:30~10:00

사 회	윤지현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개회사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축 사	김준기 (서울대학교 부총장)
축 사	정성장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1세션: 트럼프 2.0 시대와 한미의 대북 억제력 위기

10:00~12:00

사 회	전해성 (전 통일부 차관)	
발표 1	트럼프 2.0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전망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발표 2	양안 전쟁과 피로스의 승리 이후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발표 3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권용수 (국방대학교)
발표 4	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조동준, 홍예림 (서울대학교)
토 론	송승중 (대전대학교),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김인옥 (성균관대학교), 심동현 (전 한미연합사 기획참모차장)	

2세션: 한국의 핵무장과 국내 여론

13:00~15:00

사 회	이정철 (서울대학교)	
발표 1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핵 억제력 확보 필요성과 추진 전략	정성장 (세종연구소)
발표 2	인구절벽 문제와 한국의 핵무장	이대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발표 3	민주주의 후퇴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고지영 (고려대학교)
발표 4	안보 vs. 국가 위상 : 컨조인트 실험을 통한 한국 대중의 핵무장 여론 분석	정상미 (국립외교원)
토 론	윤대엽 (대전대학교), 이철재 (중앙일보),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정한용 (한국핵안보전략포럼)	

3세션: 한국의 핵무장과 국제사회의 대응 전망

15:20~17:30

사 회	김병로 (서울대학교)	
발표 1	한국의 핵무장과 국제사회의 제재 한계	노병렬 (대전대학교), 심규상 (Texas A&M DC)
발표 2	동아시아 동맹국 핵확산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	이경석 (인천대학교)
발표 3	한국 핵무장의 국제법적 정당성과 제재 회피전략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발표 4	핵무장 이외의 북핵 대응 방안: 미 확장억제 강화 vs. 첨단기술 기반 비핵무기	김양규 (국방대학교)
토 론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진활민 (전남대학교), 조현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목 차

1세션: 트럼프 2.0 시대와 한미의 대북 억제력 위기

- [발표 1] 트럼프 2.0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전망 P.01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 [발표 2] 양안 전쟁과 피로스의 승리 이후 P.11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 [발표 3]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P.39
권용수 (국방대학교)
- [발표 4] 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P.51
조동준, 홍예림 (서울대학교)
- 토 론 P.75
송승종 (대전대학교),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김인욱 (성군관대학교),
심동현 (전 한미연합사 기획참모차장)

2세션: 한국의 핵무장과 국내 여론

- [발표 1]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핵 억제력 확보 필요성과 추진 전략 P.89
정성장 (세종연구소)
- [발표 2] 인구절벽 문제와 한국의 핵무장 P.117
이대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 [발표 3] 민주주의 후퇴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P.125
고지영 (고려대학교)
- [발표 4] 안보 vs. 국가 위상 P.139
: 컨조인트 실험을 통한 한국 대중의 핵무장 여론 분석
정상미 (국립외교원)
- 토 론 P.155
윤대엽 (대전대학교), 이철재 (중앙일보),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정한용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목 차

3세션: 한국의 핵무장과 국제사회의 대응 전망

- **[발표 1] 한국의 핵무장과 국제사회의 제재 한계** P.175
노병렬 (대전대학교), 심규상 (Texas A&M DC)
- **[발표 2] 동아시아 동맹국 핵확산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 P.191
이경석 (인천대학교)
- **[발표 3] 한국 핵무장의 국제법적 정당성과 제재 회피전략** P.213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 **[발표 4] 핵무장 이외의 북핵 대응 방안:** P.223
미 확장억제 강화 vs. 첨단기술 기반 비핵무기
김양규 (국방대학교)
- **토 론** P.243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진활민 (전남대학교), 조현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th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1세션: 트럼프 2.0 시대와 한미의 대북 억제력 위기

발표 1

트럼프 2.0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전망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제문(2025.4.10.)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전망

함형필(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1. 트럼프 2.0 시대 대외관계 조정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

- 첫 8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미국 우선주의 2.0’ 기조 하 대외관계의 전면 재조정에 착수
 - 전후(戰後)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도 자체 안보를 위해 핵확산 등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 대두
 - 미국은 NATO 등 전통적인 동맹과의 협력을 약화하는 모습을 시현
 - 특히, 러·우 전쟁 조기 종결, 미·러 관계 재정립, 유럽 자강화를 통한 국익 우선 추구 등은 2기 행정부 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다만, 미국의 주요 의사결정이 전략적 틀 안에서 정교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즉흥적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
 - 캐나다, 멕시코, 유럽 국가 등의 정면 반발, 주가 하락과 경제 악화의 중첩 등으로 인해 트럼프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접어들 경우, 앞으로의 상황 예측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무차별적 관세 공세로 인해 동맹 및 비동맹과의 관계 재정렬 불가피
 - 동맹, 비동맹 구분 없는 무차별적 관세 부과로 안보 관계에 대한 부담 가중
 - 관세 부과 시기와 유예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외정책으로서의 전략적 완결성은 결여
 - 장기적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양자관계와 그들과의 다자적 유대를 약화함으로써, 전략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미국의 종합적 손실 초래 가능
 - 유럽의 결속, 주요국(독일)의 재래식 재무장과 유럽식 핵우산 추진, 아시아 동맹국 간 군비경쟁 및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감 고조 위험 등 촉발

○ 강력한 대외정책 추진력에 비해 전반적인 전략적 완결성은 미흡

- 2024 대선과 의회 선거 승리,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완비와 충성과 인선으로 막강한 대외정책 추진력 확보
-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에 대한 트럼프의 개인적 호감을 토대로 전혀 예기치 않은 협상 및 거래 성사 가능성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
 - 미국은 상반기 중 미·중 정상급 교류를 희망할 것으로 보이며,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
- 아직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면모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공개가 예상되며 이전보다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더욱 강한 대응책을 구사할 전망
- 트럼프 변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여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시하고 대중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기조는 지속 유지 예상
 -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해 유럽과의 통합을 추진했던 기존 전략에서 탈피, 유럽의 협조 없이도 대중 억제·견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재
 - 이를 통한 유럽과 중국의 자연스러운 밀착 관계 형성이 과연 미국의 국익이나 전략경쟁 승리에 유리한 것인지 의문시되는 상황

2. 동맹정책 및 핵확산에 관한 부정론과 긍정론의 양립

○ 국가안보전략(NSS), 핵태세검토(NPR) 등을 구체화하기까지는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분간 동맹 및 핵정책 관련 대내외 혼선 불가피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러·우 전쟁의 조기 종전을 위해 우방국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영토 할양, 현 정부 교체 등을 강요하면서 노골적 친러 정책을 구사
 -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과거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와의 약속 파기를 시현함으로써, 다른 우방국·동맹국과 맺었던 약속도 언제든지 철회되거나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 미국의 반동맹적 정책 채택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확장억제'를 제공받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¹⁾

-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유럽의 자체적인 핵 억제력(European Deterrent) 구축에 대한 긍정적 반응 관찰

1) Gideon Rose, "Get Ready for the Next Nuclear Age," Foreign Affairs (2025. 3. 8.).

- 미국에 대한 불신 증가와 유럽의 자체 억제력 구축 움직임은 한국 등 인태 지역 국가에도 확산될 경우 美 확장억제 체계 전반에 상당한 타격 불가피(부정론)
 - 이러한 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미국 자체 및 공약에 대한 신뢰 약화, ▲동맹에 의한 핵확산에 대한 트럼프의 느슨한 정책 의지 등을 내세우면서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 증가 추세
- 이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록 동맹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중국 견제를 최우선에 놓고 이를 위해 인태 지역 동맹국과는 강력한 연대하에 확장억제 보장 및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반대 시각도 존재(긍정론)

【부정론】

- 미국의 후퇴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유럽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을 고려할 것이며, 결국 이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시각
 - 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 지도자를 주축으로 유럽의 핵무기를 공유함으로써, 독자적 핵 억제력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럽 핵무기 사용의 최종 권한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같이 각 핵보유국의 대통령에게 귀속됨으로써, NATO 회원국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믿지 못했듯이 유럽의 독자 방식도 영국과 프랑스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불신할 가능성
 -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등에서 자체 핵무장의 검토 가능성을 암시하는 언급도 나오고 있어 이들 국가는 안보를 위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
 - 핵물질 확보, 핵무기 제조 기술 습득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하며, 과연 미국이 제재 부과 없이 핵확산을 허용하면서 동맹 체제의 포기를 감내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
- 이처럼 트럼프의 탈 NATO 가능성 및 친러 행보를 유럽 동맹 체제의 포기로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부는 핵 억제력 관련 미국과 단절된 대안 모색
 - 다만, 대다수 유럽 국가는 트럼프의 요구를 NATO 탈퇴 또는 해체로 보기보다는 유럽의 자강화, 즉 각국의 국방예산 증액, 방위비 분담 증가, 방위 역할 및 기여 확대 등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분위기
 - 특히, 핵심 국가인 영국으로서는 핵 억제력 관련 두 가지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 미국과의 협력이 긴요한 상황²⁾

- 영국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美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자체 생산 핵탄두와 미국제 미사일의 호환성이 절실한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대미 의존 상황에 노출
- 영국의 자체적인 트라이던트 성능 개량 및 차세대 전략핵잠수함(SSBN) 교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핵 억제력의 공백 발생 우려도 제기

【긍정론】

-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이익을 앞세운 정치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태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중국 군사전략의 지속성·일관성에 주목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유럽보다 인태지역 중시(미중 패권 경쟁), ▲반패권 연합의 형성, ▲인태지역 핵태세 강화, ▲핵무기 현대화, ▲저위력 전술핵무기 증강 등 맥락에서 이해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주도하게 될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그의 2021년 저서 『거부전략』을 통해 ‘대만’과 ‘남중국해’를 가장 중요한 충돌 지점으로 상정하고 중국과의 제한전 상황에서의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 콜비는 상원 군사위 청문회(2025.3.4.)에서 북한과 중국 위협으로부터 한국방위를 위한 확장억제 보장의 가치에 관한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억제 및 방위에 관한 전략적 태세는 견고하고 신뢰할만해야 하며, 직면하고 있는 북·중 위협에 대한 직시, 동맹 간 책임분담, 동맹의 최적 방어 및 전략적 지속성 유지 등에 대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대답
- 결국, 미국은 중국을 의식,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 간 차별화 정책을 추진 중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이 동맹 체제의 해체나 이를 상징하는 핵확산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해

3. 트럼프 2.0 확장억제에 대한 주요 영향 요인

-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참모진, 전문 관료 등과 정책 우선순위
 -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블러핑도 불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 인기영합주의, 아마추어리즘 등 개인적 성향 및 특징

2) <https://www.telegraph.co.uk/news/2025/03/05/delays-in-trident-renewal-deterrent-in-peril/>(6. March).(검색일: 3월 29일)

- 충성과 위주로 구성된 2기 참모진은 ▲광범위한 개입, 강력한 군사력, 동맹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우선주의자(primacists)와 ▲전 지구적 개입 자제, 보호주의, 중국 견제 집중 등에 치중하는 제한주의자(restrainers) 등으로 구분되나, 대중 전략에 있어서는 견고한 공감대 형성
- 국무부, 에너지부 등의 전문 관료 집단은 전략핵 현대화, 핵비확산 체제 유지, 현행 확장억제 체제 유지 등 입장 견지
- 정책 추진의 제약요인이 부재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 만들기에 집착하면서 결정된 정책을 대담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동기 보유
-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내정치(금리인하, 이민, 관세전쟁, 정부효율화 등)를 최우선에 놓고 국제분쟁 해결(러우 전쟁, 중동분쟁 등), 대중 견제,..., 한반도 정책 순으로 정책을 추진
-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서 경제에 대한 미국 시민의 만족도와 그와 연계된 대통령의 지지율, MAGA 운동으로 결성된 트럼프 연합의 결속 유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등이 확장억제 정책 변화 및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둘째,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수행한 '2023년 전략태세검토(strategic posture review)³⁾'의 결과

-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증강 ▲대만에 대한 군사도발 가능성 ▲사이버 및 우주 영역에서의 비핵 위협, 러시아의 ▲전략적 군사능력 확대 ▲우크라이나 침공 등 공격적이고 위험 감수적 전략 구사 등을 핵심 위협으로 제시
- 이를 위해 ▲2027~2035년 전략적 억제력 유지와 ▲중 러와의 동시전쟁에 대한 억제 능력 강화,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현대화된 핵 및 비핵 능력 확보, ▲전략적 인프라(핵 및 비핵 포함)의 신속한 확장 등을 주요 과제로 식별
- 특히, 범정부 접근법(whole-of-government) 통해 기존 국방전략을 새롭게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확장억제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 제시

3) 2009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수행한 전략태세검토임. 검토한 배경은 중 러의 핵무기 능력 증대와 군사적 도발(우크라이나 전쟁)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과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핵무기 동등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위기감 등임. Madelyn Greedon, et. al., "America's Strategic Posture," The Final Report of the 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2023. 10. 27.).

- 확장억제 정책 유지 및 강화: 동맹의 안보 보장에 중점
- 동맹과의 협력 강화: 전략적 태세 협의, 동맹 군사능력 향상, 확장억제 협의
- 전구 핵전력의 역할 강화: 전구 핵전력 전진 배치, 제한적 핵사용 대비 군사 옵션 준비, 인태 지역의 핵억제 태세 강화
- 동맹국에 대한 신뢰 보장: 신뢰성 증진 중점, 핵비확산 목표 달성
- 역내 비핵 능력 부족 보완: 핵무기 대응 옵션 보완, 동시/협력적 도발 억제
- 전략적 메시지 전달: 동맹국과의 정기 소통 강화, 美 태세·정책 지지 전인

○ 셋째, 헤리티지 재단에서 보수 정부를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한 '프로젝트 2025'⁴⁾의 정책 권고

- (핵전력 현대화 가속화) 신형 ICBM, B-21 전략폭격기, 콜롬비아급 SSBN, NC3 개량
- (아시아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NATO 모델 참조 동맹국 간 확장 억제 협력체계 구축, 한일 대상 美 전술핵 재배치 논의 참여 독려
- (핵무기 생산 확대) 플루토늄/우라늄 생산 재개, 연간 핵탄두 생산량(30 ⇒ 80개) 확대, 핵실험 재개 가능성 검토
- (대중국 억제력 강화) 전략자산 순환배치 추진, 중거리미사일 배치 검토, 한일의 자체 방위능력 증강 촉진, 동북아 2개전쟁 대비방안 마련
- (글로벌 차원의 통합된 핵전략 개발) 전략핵 통합운용계획 수립, 다영역 차원의 억제전략 개발

4. 트럼프 2.0 확장억제 정책 전망

- NPT, 동맹 체제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글로벌 확장억제 체제는 근간을 유지할 것이지만, 그 중심축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될 전망
 - 미국은 행동의 자유를 제약받지 않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의 핵보유 방지 기조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으로 전망
- 적정 시점에 들어서면 대중국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전략적 억제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측

4) Paul Dans and Steven Groves, et. al.,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Project 2025, the Heritage Foundation (2023). ISBN: 978-0-89195-174-2.

- 국방비 절약 기조에도 불구하고, 신형 ICBM(Sentinel), B-21 전략폭격기, 콜롬비아급 전략핵잠수함 등 전략핵전력의 현대화 지속 추진
 - 한국, 일본 등에 美 전술핵의 전진배치 방안, 전구 핵전력 확충, 핵·재래식 이중 용도 투발수단 개발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 태세 강화 방안 검토 및 추진
 - 연간 핵탄두 생산량 증가와 핵실험 재개 방안 검토 등 핵무기의 생산 확대 추진
-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될 것인바, 동 전략의 요체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한 미국 주도의 다자적 군사 체제를 만드는 데 있으나, 현재 미국은 다자적 접근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 특히, 2기 행정부는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에게 글로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북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요청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은 경제, 안보, 국방·군사 이슈를 연계한 가운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 확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만 유사시 지원 보장, ▲방위산업 협력,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 협력 등을 요구하는 한편, 확장억제는 비용을 요구하기보다는 태세 강화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가능성
- 안보와 에너지 이슈를 연계한 ‘123 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와 핵자장에 관한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 지역 억제력 강화 방안으로 (1) NATO 유사 모델 적용 검토, (2) 전구 핵전력 역내 배치/증강, (3)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4) MDTF(중거리미사일) 전진 배치 등에 대한 논의 가능
- 한국과의 확장억제 협력은 기존 협의 메커니즘(NCG, EDSCG, SCM-MCM 등)을 토대로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국방·국무부의 실무 라인을 중심으로 ‘한미 CNI’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측
- 한반도 확장억제 태세 강화 측면에서 ▲전술핵 배치나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에 핵무기 통제 권한 부여 등 논의 가능
 - 미국은 한미 확장억제 협력도 대중 견제의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는 관점에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고자 하거나 재편을 시도할 가능성 다대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경제 악화 등 미국 내부의 정치적 리스크 및 상황 변화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유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가능성 상존. <끝>.

19th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1세션: 트럼프 2.0 시대와 한미의 대북 억제력 위기

발표 2

양안 전쟁과 피로스의 승리 이후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2025.4.10]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핵무장 옵션과 여론>

양안 전쟁과 피로스의 승리 이후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 지용
jykim.peacekorea@gmail.com

01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발언들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2021년 3월 데이비슨(Philip Davidson)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이 최초였다. 그는 “대만은 중국이 야심차게 노리고 있는 정치적·군사적 목표고 그 위협은 향후 6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10월엔 번스(William Burns)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길데이(Michael Gilday) 미 해군참모총장이 각각 다른 공식 석상에서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년 1월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중 전쟁이 대만 해협에서 2026년에 발발할 것을 상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2월엔 번스 미 CIA 국장이 다시 한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를 군에 내렸다”고 언급했고, 곧이어 3월에는 미 의회조사국(CRS)이 그의 발언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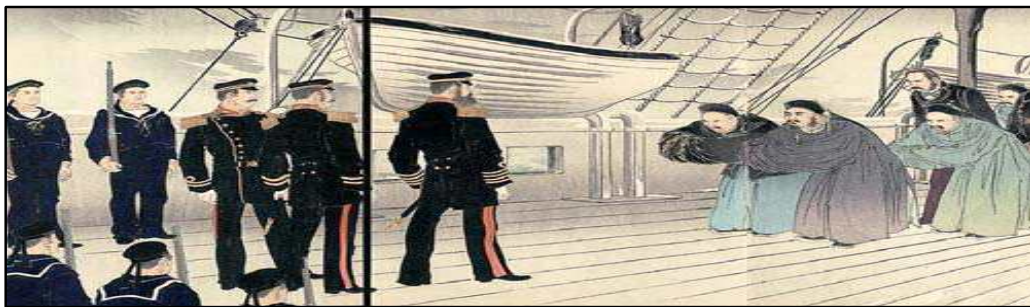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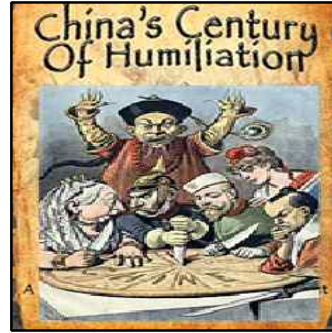
02

2024년 3월엔 아퀼리노(John Aquilino)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발언했다. 한 달 뒤 일본 방문 중에도 그는 유사한 발언을 이어갔다. 7월엔 후임자인 파파로(Samuel Paparo)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Washington Pos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하기 전에 짧고 강렬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내 임무는 지금부터 2027년까지 미군을 비롯한 동맹군들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9월엔 프란체티(Lisa Franchetti) 미 해군참모총장이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여 전력의 80%가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Project 33」을 발표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월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의 계산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향후 5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0년대 들어 대만 해협 전쟁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03



04



05

누적된 잠재적 청중비용: Accumulated Potential Audience Cost

Table 1. What to do if dissatisfied with government's foreign policies by party members and college graduates.

	Neither	BA only	CCP only	BA and CCP
Do nothing	191 45.15%	446 41.49%	26 38.81%	163 32.73%
State doing fine	61 14.42%	143 13.3%	13 19.4%	86 17.27%
<i>Subtotal (inaction)</i>	252 59.57%	589 54.79%	39 58.2%	249 50%
Discuss with friends	55 13%	164 15.26%	6 8.96%	70 14.06%
Complain on social media	65 15.37%	200 18.6%	4 5.97%	88 17.67%
Complain to government	41 9.69%	105 9.77%	8 11.94%	82 16.47%
Protest	10 2.36%	17 1.58%	10 14.93%	9 1.81%
<i>Subtotal (action)</i>	171 40.43%	486 45.21%	28 41.8%	249 50%
Total	423 100%	1,075 100%	67 100%	49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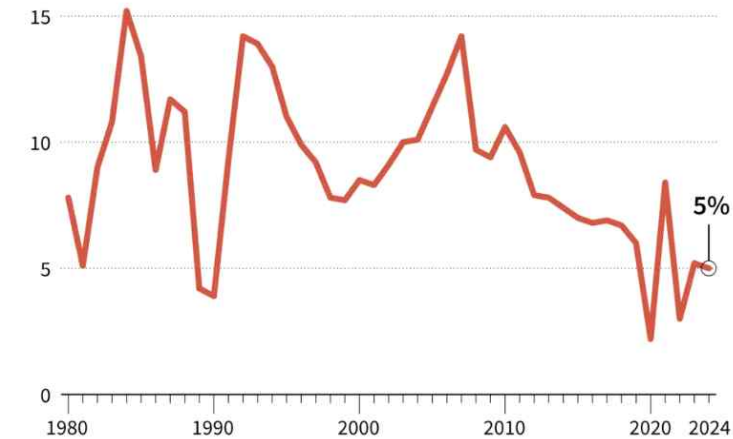
Note: Pearson $\chi^2 = 89.87$; degrees of freedom = 15; p-value < 0.001; BA = college graduate.

06

안보결집효과 유인: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Incentive

China annual GDP

Change from previous year, %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

AFP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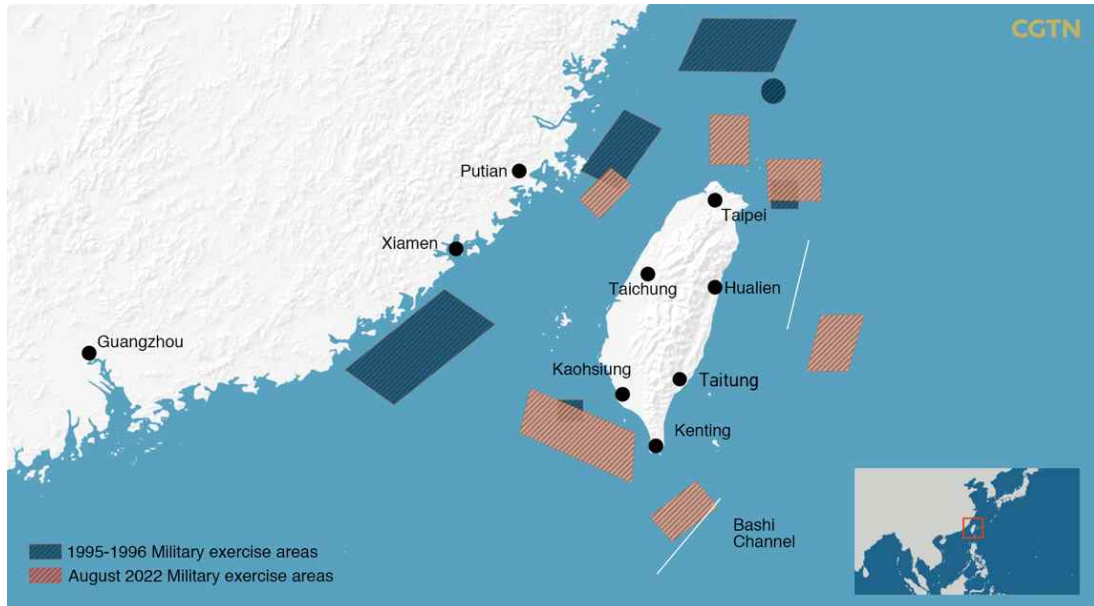
관심전환전쟁 유인: Diversionary War Incentive



민군관계에서도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현재까지 부패혐의로 숙청된 장성만 '18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중반 이후엔 12명 이상의 최고위급 장성이 해임되었는데 여기엔 2명의 국방부장도 포함되어 있다. 180명은 1927년 건군 이후 치러진 수많은 전투와 문화대혁명에서 스러진 장성들보다 많은 숫자다. 이는 군부의 불만을 초래하고, 쿠데타로 이어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군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하고, 반부패 사정(司正)에서 살아남은 장성들은 숙청되지 않기 위해 PLA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 7월 1일까지 강군몽(强軍夢)을 실현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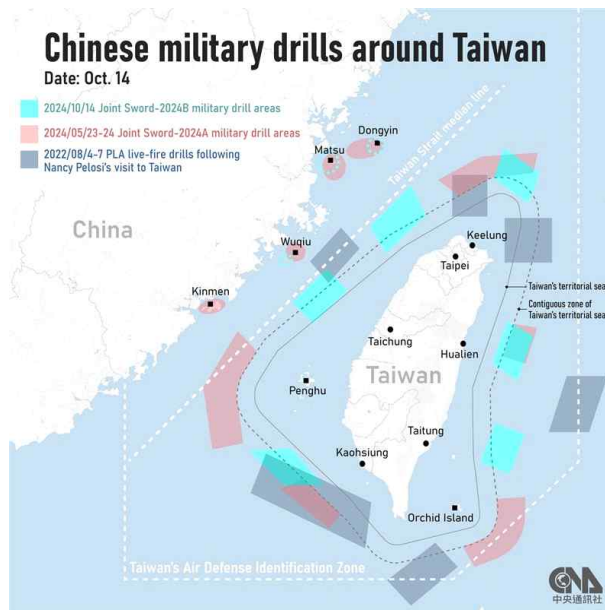
08

대만 해협 군사훈련: 1996(중간선) vs. 2022(포위)



09

대만 해협 군사훈련: 22(4일), 23(3일), 24(2일/1일), 25(???)



10



11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PLA 전투기의 대만 해협 중간선 침범	2	22	0	564	703	2,037
PLA 전투기의 대만 ADIZ 침범	11	390	972	1,738	1,703	3,075
PLA 함정의 대만 해협 중간선 침범	0	0	0	675	1,921	2,507
PLA 전투기의 일본 ADIZ 침범	26	15	23	34	50	31
PLA 함정의 일본 해역 침범	63	28	97	208	366	222
미 해군(함정/초계기)의 대만 해협 항행 작전	13	14	15	12	18	11

12

FY ^a	Number	FY ^a	Number	FY ^a	Number	FY ^a	Number
1948	737	1970	769	1992	466	2014	289
1949	690	1971	702	1993	435	2015	271
1950	634	1972	654	1994	391	2016	275
1951	980	1973	584	1995	372	2017	279
1952	1,097	1974	512	1996	356	2018	286
1953	1,122	1975	496	1997	354	2019	290
1954	1,113	1976	476	1998	333	2020	296
1955	1,030	1977	464	1999	317	2021	294
1956	973	1978	468	2000	318	2022	289
1957	967	1979	471	2001	316	2023	291
1958	890	1980	477	2002	313		
1959	860	1981	490	2003	297		
1960	812	1982	513	2004	292		
1961	897	1983	514	2005	281		
1962	959	1984	524	2006	281		
1963	916	1985	541	2007	279		
1964	917	1986	556	2008	282		
1965	936	1987	568	2009	285		
1966	947	1988	565	2010	288		
1967	973	1989	566	2011	284		
1968	976	1990	546	2012	287		
1969	926	1991	526	2013	285		

13

	전투함 총톤수	항공모함의 수	잠수함의 수 디젤, 원자력 추진
1945	11,300,000	119	258, 0
1950	9,220,999	105	199, 0
1960	9,438,732	71	172, 12
1970	7,592,741	44	101, 86
1980	4,187,127	14	14, 117
1990	4,044,135	17	0, 129
2000	2,906,978	12	0, 73
2010	2,830,753	11	0, 71

14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Jones Act)

1965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제정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The Byrnes-Tollefson Amendment)

U.S.	VS	CHINA
<200 U.S. Flag Oceangoing Vessels	 Fleet	>7,000 Chinese Flag Oceangoing Vessels
<5 Orders (2023)	 Shipbuilding	>1,700 Orders (2023)
<153,000 U.S. Workers	 Shipbuilding Workforce	>600,000 Chinese Workers
<12,000 Merchant Mariners	 Mariners/ Seafarers	>1.7 Million Seafarers

15

중국은 매년 이지스 구축함 5-8척, 호위함 3-4척, 원자력 추진 잠수함 2-3척의 건조를 동시에 착수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각각 1척만 건조에 착수한다.

주요국의 최근 구축함 건조 기간

미국	Patrick Gallagher	8년
	John Basilone	7년
영국	Duncan	6년
중국	난창	6년
일본	시라누이	3년
한국	정조대왕	3년
	다산 정약용	2년

주요국 최근 호위함 건조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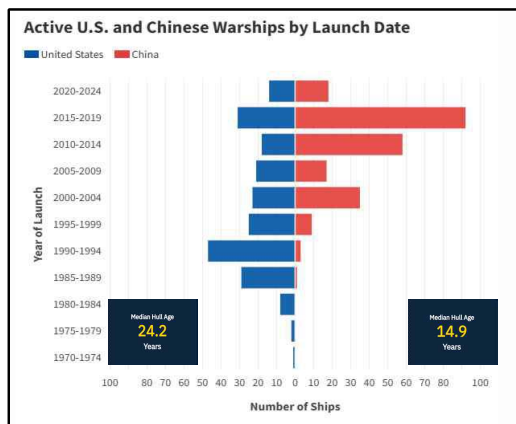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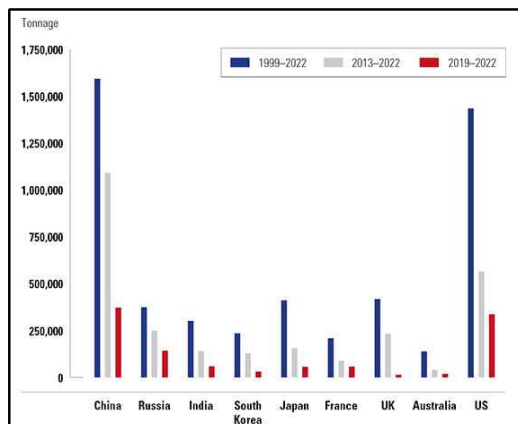
영국	Cardiff	9년
	Venturer	6년
미국	Constellation	7년
스페인	Bonifaz	6년
독일	Niedersachsen	5년
	Al-Qadeer	3년
중국	난양	5년
프랑스	Aquitaine	5년
	Kimon	4년
이탈리아	Carlo Bergamini	5년
	Spartaco Schergat	4년
네덜란드	Unnamed ASWF Class	4년
한국	동해	3년
	천안	3년
일본	아가노	3년

16

Numbers of Chinese and U.S. Navy Battle Force Ships, 2000-203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1	1	3	4	4	6	8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5	4	5	6	7	10	13
Diesel attack submarines	56	56	48	53	55	55	55
Aircraft carriers, cruisers, destroyers	19	25	25	26	43	55	65
Frigates, corvettes	38	43	50	74	102	120	135
Total China navy battle force ships, including types not shown above	210	220	220	255	360	400	425
Total U.S. Navy battle force ships	318	282	288	271	297	287	290 or 291
U.S. total above compared to China total above	+108	+62	+68	+16	-63	-113	-135 or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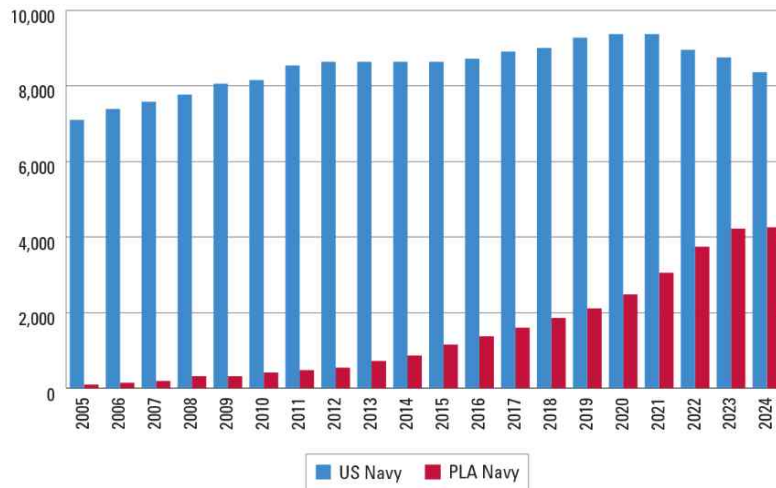
17



2010년부터 2024년 사이 건조된 중국의 신형 전투함은 중국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의 척수와 톤수 모두에서 70%를 상회하고, 그 척수와 톤수 모두 같은 기간 미국의 2배가 넘는다.

18

US Navy and PLA Navy surface combatants VLS cell totals, 2005–24



미사일 타격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대만 해협 전쟁 발발 시 미 해군은 한 달에 10,800발의 미사일이 필요하지만, 개전 1주 만에 미국의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

	1954	2012	2024
미국 (지배국)	9,188,231	2,862,437	3,601,900
중국 (도전국)	10,324	447,280	1,557,178
상대적 격차	9,177,907	2,415,157	2,044,722
(중국-미국)×100	0.112%	15.62%	43.23%

하지만, 미국의 해군력이 여전히 압도적인 지표도 많다. 2024년 6월 현재 해군 함정 총 톤수에서는 미국(3,601,900톤)이 중국(1,557,178톤)보다 2.3배 우월하다. 미국의 항공모함 11척 모두가 원자력 추진인 것과 달리, 중국이 보유한 3척의 항공모함은 재래식 추진이고, 함재기 규모도 미국보다 훨씬 작으며, 운용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 미국이 보유한 69척의 잠수함(51척의 SSN, 4척의 SSGN, 14척의 SSBN) 모두 원자력 추진이나 중국이 보유한 71척의 잠수함(55척의 SS, 10척의 SSN, 6척의 SSBN) 가운데 원자력 추진은 16척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의 <함정 건조 계획안 2054>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러한 지표와 계획을 중시하는 이들은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20

미 해군의 잠수함부대는 태평양함대와 대서양함대로 구성되며, 각 함대는 다시 4개의 전단(전대)으로 구성된다. 미국이 보유한 69척의 잠수함 가운데 34척이 태평양함대에 배속되어 있다. 하와이에 14척, 샌디에이고에 4척, 워싱턴주 벵거에 13척, 일본 요코스카에 3척이 배속되어 있다. 문제는 요코스카의 7함대에 배속된 단 3척의 SSN이 71척의 중국 잠수함과 최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미 해군 함정의 평균 선체 연령은 24.2년이지만, 잠수함은 수상함보다 훨씬 더 노후화된 상태에 있다. 가령, 2027년까지 퇴역하게 되는 총 10척의 평균 선체 연령은 38.2년이고, 2028년에 퇴역하는 4척의 평균 선체 연령은 42.5년이며, 2029년에 퇴역하는 1척은 39년이다. 이런 식으로 원자로 수명주기 42년을 이미 초과했거나 42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당수의 잠수함이 퇴역을 앞두고 있다. 미 해군은 잠수함 전력에 공백이 없도록 가장 규모가 큰 Ohio급 SSBN/SSGN 14척을 포함해 노후화된 다수의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최신형 Columbia급 SSBN/SSGN 12척을 포함해 신형 잠수함 건조를 해군의 최우선 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퇴역과 취역의 균형이 흐트러져 현재 69척에서 향후 42척까지 줄어드는 기간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중국으로서는 대만 침공을 위한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잠수함은 현재 71척에서 76척으로 5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SS가 아닌 SSGN 3척, SSBN 2척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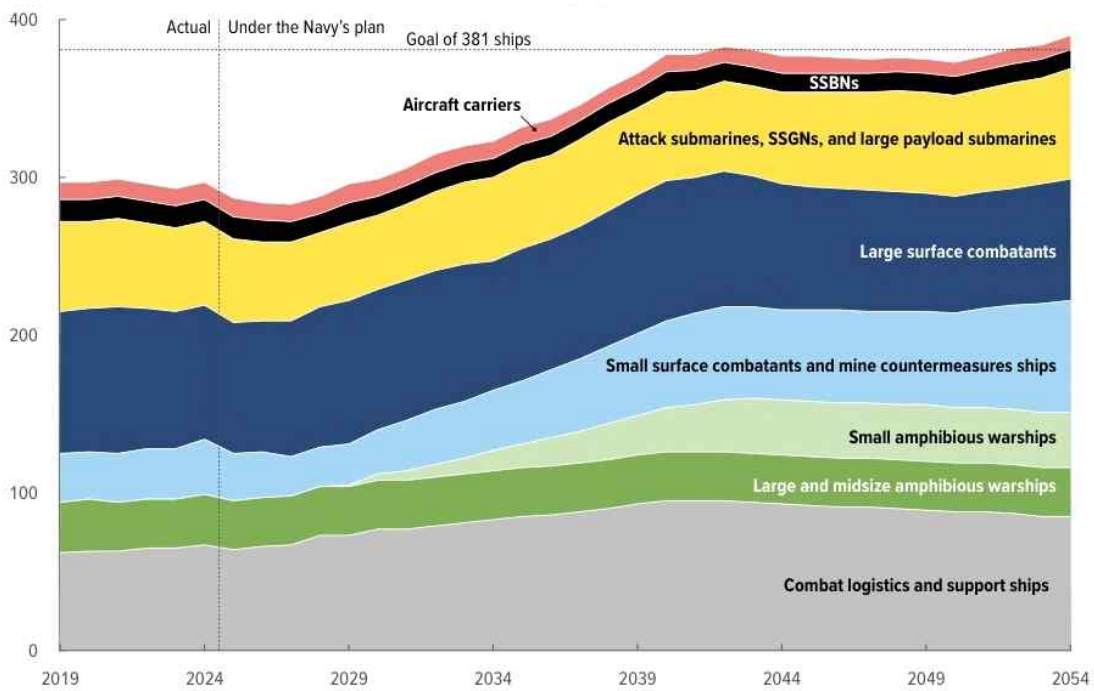
21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은 영국, 호주와 체결한 3자 방위 파트너십인 AUKUS를 통해 호주의 SSN 전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핵심 내용(Pillar I)은 ① 미국이 의회의 승인하에 203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Virginia급 SSN 3-5척을 호주에 판매하기 시작하고 ② 2030년대 후반까지 영국이 설계하고 영국에서 건조한 1척의 SSN을 호주에 양도하며 ③ 2040년대 초반까지 영국의 지원으로 호주에서 건조한 1척의 SSN을 호주가 인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3-5척의 Virginia급 SSN을 호주에 판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의 현 건조 능력으로는 잠수함 전력 유지 목표의 76%조차 달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영국은 자국의 주력 SSN인 Astute급 SSN을 개량한 후속 SSN을 호주에 제공할 계획이지만, 영국의 건조 능력은 미국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이 유력시되는 2027년 또는 2030년 이전까지 호주의 SSN 획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AUKUS Pillar I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AUKUS Pillar I을 추진하는 동안 호주의 Collins급 SS 6척 모두 노후화되어 2030년대에 퇴역할 예정인바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잠수함 전력이 AUKUS에 의해 보완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

22



23



24

381척은 2022년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294척보다 87척이나 많은 수치다. 문제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잠수함, 대형 수상함, 중대형 강습상륙함의 수가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된 채로 87척의 소형 수상함·강습상륙함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또한, 미 의회예산국의 <함정 건조 계획안 2054>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은 이른바 150척 무인함정으로 구성된 유령함대(ghost fleet)의 건조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들 계획대로 미국은 해군력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으로 인해 선박 건조 능력이 중국의 1/232이 되어 버린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1981년의 600척 해군 구상, 2007년의 1,000척 해군 구상, 2017년의 Zumwalt급 구축함 32척 건조 구상 등 말 잔치로 끝난 과거 전례도 이들 계획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 가장 중요하게, 중국이 2054년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25

물론, 미국의 해군력 복원을 위해 동맹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은 2025년 2월 5일 미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군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기에 법안의 의회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향후 30년 동안 해마다 42조 원에 달하는 군함을 발주할 계획에 있다. 한국은 이러한 발주로부터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후보국가다. 가령,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이지스 구축함 1척을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과 기간이 각각 미국의 1/2과 1/3로, 연간 5척 이상 건조가 가능하다. 중국의 이지스 구축함 연간 건조 능력이 5-8척인 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잠수함 건조 능력에서는 (SLBM 탑재가 가능한 3,000톤짜리 안창호급 SSB 포함) 한국 해군이 발주한 24척 중 17척을 건조한 한화오션이 탁월하다. 한화오션은 이미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군함 수주에는 규제비용, 인내비용 등 숨은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동맹국 참여의 지속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6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대만 침공 가능성 분석: 인정투쟁 이론과 네 가지 해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2호 (2025년 4월 31일 출간예정)

본 연구는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정치경제적 동기의 측면에선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물질적 토대, 특히 해군력의 측면에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통념은 세력전이 이론이다. 본 연구는 세력전이 이론에 도전하는 인정투쟁 이론이라는 대안이론을 개발하고, 제1차 세계대전,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을 대상으로 두 이론을 검증한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인정투쟁 이론이 세력전이 이론보다 경험적으로 더 유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의 발견에 따르면, **도전국이 개전을 결정하는 경로는 두 가지다. 첫 번째 경로는 지배국 해군력의 50%였던 도전국이 100%까지 추격하면서 얻게 된 자신감이 별도의 인정욕구와 맞물리면서 개전을 결정하는 경우다. 청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로는 세력전이 이론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 경로는 지배국 해군력의 0%였던 도전국이 50%까지 추격하면서 얻게 된 회고적 성취감 및 성급한 추격 전망이 별도의 인정욕구와 맞물리면서 개전을 결정하는 경우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일전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두 번째 경로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이 가능한 이유도 이 경로가 역사적으로 실재했기 때문이다.**

“대만 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연쇄 발발 시 한미일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
『한국의 핵안보프로젝트: 쟁점과 과제』 1권 8장 선인문화사 (2025년 7월 출간예정)

27

사례	t_0 시기 해군력 비율	t_1 시기 해군력 비율	t_1 시기 상대적 격차	t_0-t_1 사이 해군력 비율의 변화 추세		폭력의 강도
1	100:0	100:50	50	0	0.5	0.5
2	100:1	100:50	50	0.01	0.5	0.49
3	100:10	100:50	50	0.1	0.5	0.4
4	100:20	100:50	50	0.2	0.5	0.3
5	100:10	200:100	100	0.1	0.5	0.4
6	100:0	100:80	20	0	0.8	0.8
7	100:1	100:90	10	0.01	0.9	0.89
8	100:10	100:100	0	0.1	1	0.9
9	100:90	100:100	0	0.9	1	0.1
10	100:0	100:100	0	0	1	1

28

구분	도전국의 인정욕구	도전국의 인정욕구 촉발요인	도전국의 해군력 증강 계기 및 당시 지배국 대비 해군력 비중		전쟁 직전 지배국 대비 해군력 비중
1차 세계대전 지배국: 영 도전국: 독	동등한 열강 지위	지배국 대비 식민지 면적	빌헬름 2세 즉위	25.64% (1888)	43.30% (1913)
청일 전쟁 지배국: 청 도전국: 일	조공 체제 이탈 후 동등한 국가 관계	청과 조선의 텐진 조약(1885) 무시 및 아산 포고문	중국의 양무운동	56.26% (1881)	105.58% (1893)
러일 전쟁 지배국: 러 도전국: 일	만주와 한반도 전역의 패자	러시아의 삼국간섭 및 랴오동 반도 반환	러시아의 뤄순항 조차, 한반도 중립화 제안 및 균형 획득 시도	18.92% (1895)	44.25% (1903)
태평양 전쟁 지배국: 미 도전국: 일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전역의 패자	서구 열강의 후발주자 견제 및 워싱턴체제 내 9개국 조약	미국의 오렌지플랜	46.71% (1907)	95.31% (1940)
대만해협 전쟁 지배국: 미 도전국: 중	대만 통일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전역의 패자	트럼프 2.0 정부의 중국 때리기 정책??	시진핑 집권	15.62% (2012)	43.23% (2024)

29

1차 세계대전 (1914)	1888	1898	1913
영국 (지배국)	650,916	1,248,970	2,562,362
독일 (도전국)	166,901	288,392	1,109,611
상대적 격차	484,015	960,578	1,452,751
(독일÷영국)×100	25.64%	23.09%	43.30%
러일전쟁 (1904)	1895	1900	1903
러시아 (지배국)	301,444	446,686	538,363
일본 (도전국)	57,052	213,195	238,253
상대적 격차	244,392	233,491	300,110
(일본÷러시아)×100	18.92%	47.72%	44.25%
대만 해협 전쟁 (2027?)	1954	2012	2024
미국 (지배국)	9,188,231	2,862,437	3,601,900
중국 (도전국)	10,324	447,280	1,557,178
상대적 격차	9,177,907	2,415,157	2,044,722
(중국÷미국)×100	0.112%	15.62%	43.23%

	1954	2012	2024
미국 (지배국)	9,188,231	2,862,437	3,601,900
중국 (도전국)	10,324	447,280	1,557,178
상대적 격차	9,177,907	2,415,157	2,044,722
(중국÷미국)×100	0.112%	15.62%	43.23%

중요한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 시기에 증강된 중국의 해군력이다. 58년간(1954-2012) 436,956톤이 증강되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재임한 12년간(2012-2024) 1,109,898톤이 증강되었다. 이러한 경이로운 해군력 증강을 단기간에 이룬 시진핑 국가주석은 엄청난 회고적 성취감에 취할 수밖에 없고,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빨리 추격할 수 있다는 성급한 전망에 사로잡히기 쉽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백년국치, 중국몽, 강군몽, 해양강국, 신형대국관계 등의 담론과 태평양 양분 발언 등은 자아도취적인 회고적 성취감과 성급한 추격 전망이 발현된 것일 뿐이다.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역사적 완성으로서의 대만 통일이라는 이정표육구를 실현할 폭력적인 인정투쟁을 2027년에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2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한국
항공기 손실	748	774	161	전멸	차출된 주한 미공군 2개 비행대대 전멸
함정 손실	155척	함모 4척 수상전투함 43척 SSN 15척	26	전멸	N/A
병력 손실	52,000	10,160	가네다, 이와쿠니, 요코다, 미사와 등 공군기지 전멸	85,000	N/A



33



34

대만 해협 전쟁 시뮬레이션만큼의 손실을 보지 않더라도 한미일 항공전력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상쇄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대비 7배 이상의 항공전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개전 직후 “이틀 천하”를 제외하고 3년 내내 대공제압과 공중우세에 실패한 사례는 중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개전 직전 러시아는 전자/신호정보 정찰기,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휴민트를 동원하여 우크라이나의 방공자산 관련 표적 정보 세부지도도를 완성했다. 개전 당일엔 최신행/개량형 전투기(SU-35, SU-34, SU-30, SU-25, MIG-29 등)에서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지상 및 해상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폭기 등으로 우크라이나의 고정형 방공자산 100여 대를 일시에 무력화시켰다. 동시에 강력한 전자전을 병행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조기경보, 표적획득, 화력 통제 레이더를 불능화시켰다. 우크라이나의 이동형 방공자산인 250여 대의 S-300도 긴급히 분산, 대피하는 바람에 임무 수행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본토 내 300km까지 진출했다.

35

그러나 강력한 전자전으로 자국 항공기까지 영향을 받자 3일째부터 러시아는 전자전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이동식 방공자산이 가동되었고 ‘사격 후 진지 이탈 (shoot- and-scoot)’ 방식을 신속히 수행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단거리 휴대용 방공체계로 러시아 전투기의 저고도 근접항공작전을 차단했다. 결국, 러시아의 대공제압과 공중우세는 이틀 천하로 끝났고 종전을 앞둔 현재까지도 러시아 공군은 방공위협 범위 밖에 체공하면서 FAB-1500 활공폭탄을 활용해 지상군을 지원하는 활동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상당 수준의 통합방공망을 구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공제압과 공중우세 획득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활용했던 러시아제 방공자산과 단거리 휴대용 방공체계가 북한으로 다량 도입될 경우 한미일 항공전력의 대공제압과 공중우세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대만 해협 전쟁으로 미국과 일본의 항공전력 지원이 지연, 축소, 제한될 경우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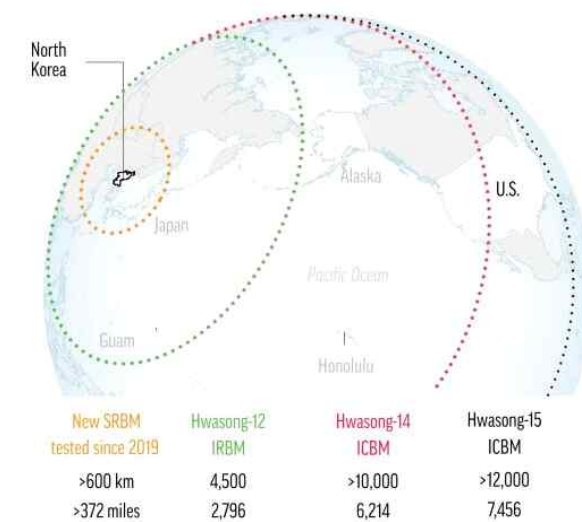
Estimates and projec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Expert·Institute(Date)	Year	2017 (Estimate)	2020 (Estimate)	2021 (Estimate)	2023 (Estimate)	2027 (Prospect)	2030 (Prospect)
Siegfried Hecker (April 2021)				45			
U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2)		Max. 60			116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January 2023)					80-90		Max. 166
RAND·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1)		31- 62	67- 116			200 (151-242)	
RAND·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3)					Min. 180		Max. 300
Part of the ROK military (Dong-a Ilbo, October 31, 2023)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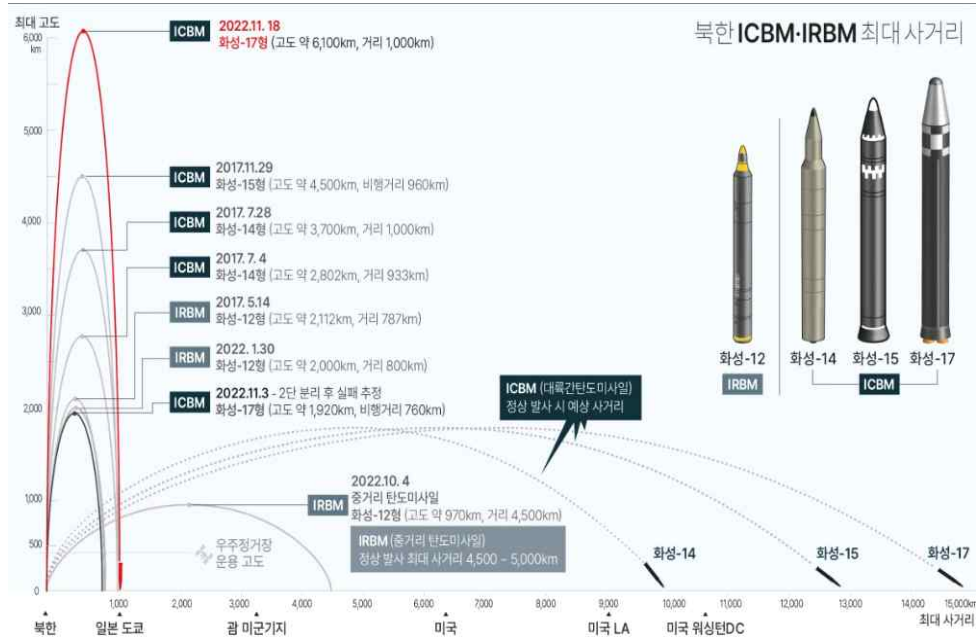
37

Estimated range of North Korea's missiles

The ballistic missile inventory includes mobile systems designed to be fired from various vehicles and submarines. North Korea'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have a range greater than 10,000 kilometers.



38



39

EQUIPMENT BY TYPE (ε)

SURFACE-TO-SURFACE MISSILE LAUNCHERS

ICBM 17+: 6+ Hwasong-14/-15/-15 mod 1/-18 (all in test); 11+ Hwasong-17 mod 1 (in test); (Earlier Hwasong-13/-13 mod designs untested and presumed cancelled)

IRBM 10+ Hwasong-12/-12 mod 1 (in test)

MRBM 17+: ε10 Hwasong-7 (Nodong mod 1/mod 2); 7+ Pukgusong-2 (in test); some Scud-ER

SBRM 69+: 30+ Hwasong-5/-6 (RS-SS-1C/D Scud-B/C); 1+ Hwasong-8/-8 mod 1 (in test); 17+ Hwasong-11A (KN-23) (road & rail mobile variants); 9+ Hwasong-11B (KN-24) (in test); 6+ Hwasong-11C (KN-23 mod 1) (in test); some Hwasong-11S (KN-23 mod 2) (in test); 6+ Scud (mod) (status uncertain)

GLCM some Hwasal-1/-2 (in test)



비록 소량이긴 하지만 44발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미국의 MRBM, IRBM, ICBM 요격률이 대략 75% 정도라고 가정하면, 44발 가운데 11발은 요격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1발을 미국 상공의 고고도(30km 이상)에서 핵폭발시키면 전자기펄스(EMP)로 인해 최소 5개 이상의 주(州)에서 수개월 간 전기와 통신이 마비될 수 있다. 만약 요격되지 않은 ICBM 11발이 미국 본토 상공의 고고도에서 터지면 미 50개 주 전체가 마비된다. 미국이 이를 복구하는 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정전과 마트의 영업 중단 등으로 굶어 죽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0



EQUIPMENT BY TYPE (ε)

SURFACE-TO-SURFACE MISSILE LAUNCHERS

ICBM 17+: 6+ *Hwasong-14/-15/-15 mod 1/-18* (all in test); 11+ *Hwasong-17 mod 1* (in test); *Hwasong-19* (in test); (Earlier *Hwasong-13/-13 mod* designs untested and presumed cancelled)

IRBM 10+: 10+ *Hwasong-12/-12 mod 1* (in test); some *Hwasong-16* (in test); some *Hwasong-16B*

MRBM 17+: ε10 *Hwasong-7* (*Nodong mod 1/mod 2*); 7+ *Pukgusong-2* (in test); some *Scud-ER*

SBRM 319+: 30+ *Hwasong-5/-6* (*RS-SS-1C/D Scud-B/C*); 1+ *Hwasong-8/-8 mod 1* (in test); 17+ *Hwasong-11A* (*KN-23*) (road & rail mobile variants); 9+ *Hwasong-11B* (*KN-24*) (in test); 6+ *Hwasong-11C* (*KN-23 mod 1*) (in test); 250 *Hwasong-11D*; some *Hwasong-11S* (*KN-23 mod 2*) (in test); 6+ *Scud* (mod) (status uncertain)

GLCM some *Hwasal-1/-1D-3/-2* (in test)

41



42



정치 국방-북한

북, '전술핵' 발사대 250대 최전방에... 김정은도 "힘에 의한 평화"

김정은,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배치 연설

이재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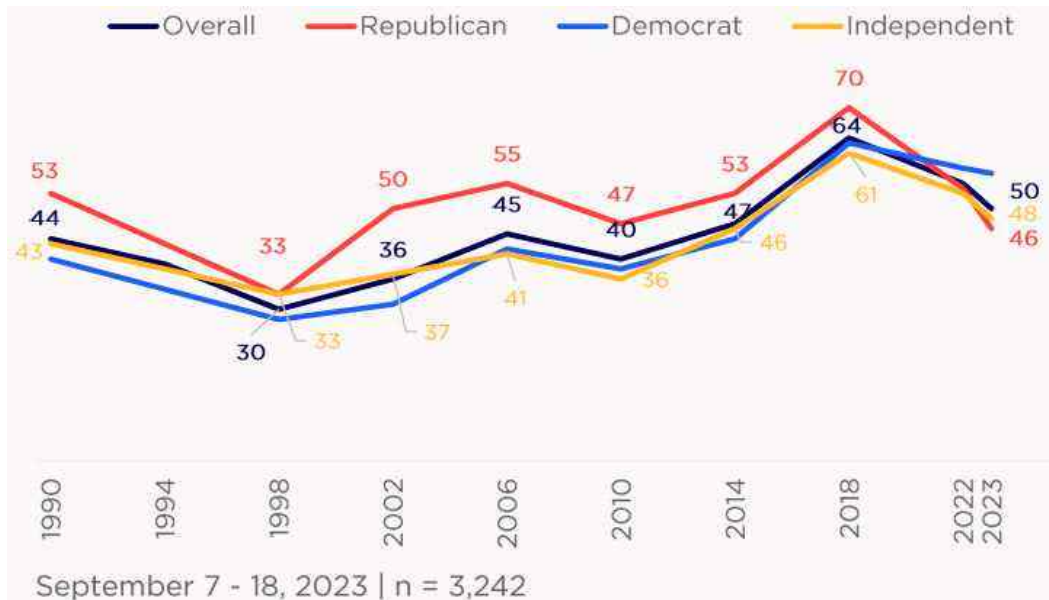
수정 2024-08-05 14:55 등록 2024-08-05 10:58



43

2027년경 대만 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 또는 연쇄 발발 시, 242개의 핵탄두가 탑재된 MRBM, IRBM, ICBM, SSBN, CRBM, SRBM, 해일 등을 보유한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 2023년 4월 26일의 워싱턴 선언 이후 창설된 한미핵협의그룹(NCG)이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핵억제·핵작전 지침과 핵·재래식 통합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가 대만 해협 전쟁과 연동된 한반도 유사시에도 작동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과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프랑스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의 유명한 질문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대만 해협 전쟁에서 고전하는 와중에 또는 피로스의 승리를 하자마자, 미국인들에게 “연평도, 인천, 서울을 위해 괌, 하와이, 워싱턴 D.C.를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피로스 1세처럼 “중국에 이어 북한에 한번 더 승리하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라고 답하고 참전에 주저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44



45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참전을 지지하는 미국인 응답자 비율은 2021년 63%, 2022년 55%, 2023년 50%로 하향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공화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경우 2018년 70%에서 2023년 46%로 24% 포인트나 하락했다. 2025년 현재의 미국은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그야말로 견고한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다. America Only를 표방한 공화당 단점정부는 공화당 지지층의 여론을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다. 구속받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위성된 선언과 NCG는 각각 종이 꼬가리와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분위기에서 동일한 여론조사를 한다면 참전 지지 비율의 하락폭이 문제가 아니라 주한 미군의 철수나 확장억제의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질 수도 있다. 이미 2012년에 미국은 ‘두 개의 전쟁 동시수행 전략’을 폐기했다. 중국과의 결전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하도록 강압하는 미국의 현 모습이 그 증거다. 또한, 북한에 의한 현상변경보다 중국에 의한 현상변경이 국제정세에 훨씬 더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 해협 전쟁에만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대만 해협 전쟁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능부전에 빠지게 만들고 한국을 핵인질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북한에 제공한다.

46

제417회-외교동일제1차(2024년8월13일) 53

대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나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밀고 갈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스타일을 보면 오히려 더 밀고 갈 것으로 돌진하는 식입니다. 위태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미일은 또다시 3차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또 한 차례 전진을 이룬 것 같은데 다시금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전행을 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서는 지속 가능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뻔합니다.

외교 현안에 대한 비밀주의, 일방주의적 접근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핵협의그룹 후속 조치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 전에 대해서도 양측이 무슨 사항을 협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협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방주의와 비밀주의를 정부가 재고하기를 촉구합니다.

핵협의그룹의 경우를 보면 정부는 이제서 우리가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라는 확실하게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협의그룹이 출범할 때 우리의 주 관심사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해 올 때 미국이 신속히, 단호히, 충분히 대응하도록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자산에 대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미국은 핵 자산 운용에 대한 타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핵 위험은 아주 비상한 상황이고 한국 내에 핵무장론도 비등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자산에 대해서 주문할 수 있는 각별한 핵협의체제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엔 NCG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가이드라인은 핵 발전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 과정에 우리의 견해를 어느 만큼 반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미국의 핵전략과 우리의 제대식 전략이 통합된 것을 부각시킵니다. 이것은 미국의 관심사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직과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입부를 특별 배정할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지만 주한미군대사는 한반도 일부 수행을 위해 특정 자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북핵 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됐다는 얘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또 미 측의 NCG 가이드라인 서명자인 비관 나탈리아는 차관보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제대식에서는 특정 일부나 목표에 특정 무기를 배정하지 않는다. 우리 자산을 미리 배정하면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아주 오래된 입장입니다.

북핵으로 우리가 피격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즉각 핵무기로 1차 대응을 할 것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핵으로 대응을 가급적 피하고 이번엔 통합된 한국 측 자산을

54 제417회-외교동일제1차(2024년8월13일)

포함한 제대식 전략으로 1차 대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연히 핵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대식과 핵전략이 통합된 대응력을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각 위원** 우리가 미국에다 대고 1차 대응은 핵이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미 측의 그런 사정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1차 대응은 핵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미리 그런 상황에, 가정적인 상황에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맞게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성각 위원** 그것은 미국 측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 말씀은 미국의 자료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어느 만큼 돼 있는지의 의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핵을 피격받았을 적에 미국이 핵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확장억제라는 것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우리의 억제력을,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나 그리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 기반 동맹으로서 단계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작년부터 워싱턴 선언 이후 NCG 설치에서부터 핵발전 지침에 이르기까지 한이 간 협의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진행이 돼 왔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을 꼭 들어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각 위원**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냥 하십시오.

○**위성각 위원** 여기 마이크가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시고.....

○**위성각 위원** 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번엔 NCG 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특별한 진전은 제가 보기에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 논의 중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위원님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각 위원** 미국이 우리가 피격받았을 때 1차 대응을 핵으로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

47

2027년은 대만 해협 전쟁과 한반도 전쟁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발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해이다. 혹자는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법이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이 종식되자마자 러우전쟁과 가자지구전쟁이 발발했다. 이들 네 가지 전쟁의 공통된 특징은 전쟁 당사자 중 일방이 핵무기 보유국이고 다른 일방은 비보유국이라는 점이다. 전쟁의 양상은 전염성을 갖는다.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이 종식된다면 또 다른 두 개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이들 전쟁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일방의 절제되지 않는 폭력행사를 목도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 목도의 주체가 아닌 폭력을 당하는 객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오래된 격언이지만, 전쟁의 시대가 되어버린 현재도 매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경쟁상대는 시간이다. 쓸데없는 논쟁으로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 이미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가적 리더십 부재로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다. 대한민국은 시간과의 경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구한말, 시간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청, 일본, 서방의 먹잇감이 되었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Don't give
up the
ship

19th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1세션: 트럼프 2.0 시대와 한미의 대북 억제력 위기

발표 3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권용수 (국방대학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대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2025.4.10.

권 용 수 (국방대 명예교수)

발표 내용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 (김정은 시대)
-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진전 및 위협
 - 북한의 핵 기술 진전 및 위협
 -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 및 위협
-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 맺음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 (김정은 시대)

핵·미사일 고도화 단계

기준일 : 2025.03.31.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3

북한의 핵 기술 진전 및 위협

핵실험 및 능력

-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점증적 폭발력 증가 (0.8kt → 250kt 수준)
 - 총 6차례('06.10-'17.9) 핵실험을 했으나 폭발력에 대해서는 발표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
 - 6차 핵실험 폭발력에 대해 한국기상청은 50kt(리히터 5.7)으로 발표했지만, 250kt(리히터 규모 6.1) 이상이 일반적인 국제적 평가
 - ※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 폭발력의 11배 수준
 - ※ 미 지질조사국(USGS)과 중국지진센터(CENC)는 리히터 6.3, 일본기상청과 CTBTO와 NOSAR 6.1
- 기술핵심선, 전문가 평가 및 기존 핵 개발 국가의 소형화 달성 기간(2-7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및 경량화는 신뢰성과 고도화만 남아 있다” 판단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4

북한의 핵 기술 진전 및 위협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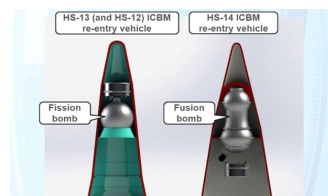
- 2000년대 **제한된 수준의 핵 소형화 기술 보유**
 - '80년대 말 - '00년대 초반 : 파키스탄과의 핵·미사일 커넥션
 - "'90년대 초 노동미사일에 탑재용 핵무기를 제작하고 있다" 평가 (미국 CIA)
 - A.Q. Khan 증언 : 1999년 북한 방문 시 **직경 24인치(61cm)의 노동미사일 탑재용 핵탄두** 목격
- 2016년 3월 핵탄두 공개 전까지 핵탄두 소형·경량화 능력을 **무게 500kg, 직경 90cm**로 추정했지만, 이후에는 **200-300kg 및 60cm**까지 **전향적 평가**



핵탄두 공개('16.3.)



수소탄 공개('17.9.)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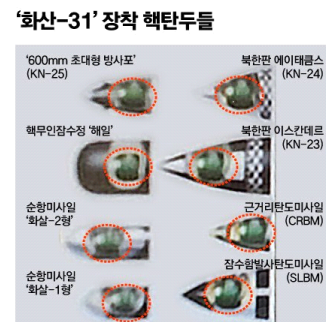
5

북한의 핵 기술 진전 및 위협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계속)

- 장거리 탄도미사일 탑재용으로 추정되는 **수소폭탄 공개('17.9.)**
- 미 국방정보국(DIA)은 2017년 8월 "북한이 **장·단거리 미사일 모두에서 핵 장치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수준에 도달했다" 평가
- 표준화된 **전술핵탄두 '화산-31' 공개 ('23.3.)** : 신형 전술유도무기(KN-23, -24, -25)까지 탑재 가능한 **직경 40-50cm, 무게 200-300kg 수준의 소형·경량화 평가**

-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 전략순항미사일과 신형 전술유도 무기(KN-23, KN-24) 핵탄두 공중폭발 모의시험 ('23.3.)
- 초대형 방사포(KN-25)를 사용한 핵탄두 공중폭발 모의시험 ('24.3. 및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24.4.)
- 신형 전술유도무기(KN-23, KN-24, KN-25), 핵무인 잠수정, 전략순항 미사일, 미니 SLBM, CRBM 등은 핵탄두 탑재 능력 유무를 떠나 북한 핵전략 목표, 작전적 필요성, 관련 북한 발표 등을 고려시 **전술핵탄두 탑재 목표는 분명함.**



자료: 북한 관영매체 및 주요 연구기관 분석 참조 The JoongAng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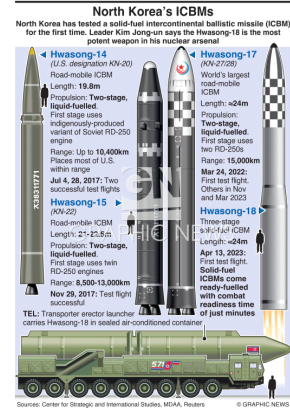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6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 및 위협

북한 미사일 개발 및 능력

- 미사일 기술은 MIRVs 관련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 단계에 있으며, '병법강군화'와 '다병종강군화'와 같은 명확한 개발 전략하에서 작전임무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개발
- 2021년 부터는 미사일 고도화뿐만 아니라 전략무기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핵사용을 전제로 전략/전술, 교리 개발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7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 및 위협

장거리 미사일 (김정은 시대)

전략 탄도미사일		설 명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무수단 (액체연료)	· 사거리 2,500-4,000km급 IRBM · 비행시험 없이 '07년 전력화. '16년 6월 첫 비행시험(최고고도 1,413km, 비행거리 400km)
	화성-12형 (액체연료)	· 사거리 4,500km급 IRBM으로 5회 비행시험 성공('17년 3회, '22년 2회) · 무수단 미사일의 낮은 신뢰성에 대한 대안 및 ICBM 개발 과정의 중간 버전 · 5차 시험발사('22.10): 최고고도 970km, 비행거리 4,500km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화성-13형 (KN-08/KN-14)	· '12년 열병식에서 목업 형태로 처음 공개(KN-08) 후 진화적 형상 발전 (시험발사 없음) · '12년(KN-08) → '13년(KN-08) → '15년(KN-14)
	화성-14형 (액체연료)	· 북한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ICBM(사거리 10,000km ICBM, 2회 비행시험) · 1차 시험발사('17.7): 최고고도 2,802km, 비행거리 933km · 2차 시험발사('17.7): 최고고도 3,724km, 비행거리 998km
	화성-15형 (액체연료)	·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3,000km급 ICBM(2회 비행시험) · 2차 시험발사('23.2): 최고고도 5,768km로 989km 비행
	화성-17형 (액체연료)	· 15,000km급 전 지구권 초대형 ICBM(3회 비행시험) · 3차 시험발사('23.3): 최고고도 6,045km, 비행거리 1,000km · 2,500-3,500kg의 페이로드 탑재 가능, 잠재적 다탄두 운반 능력
	화성-18형 (고체연료)	· 최대사거리 15,000km의 북한 최초 3단 고체연료 ICBM(3회 비행시험) · '23년 2월 처음 공개 후 '23년 한 해 동안 3회 비행시험 성공 · 3차 시험발사('23.12): 최고고도 6,518km, 비행거리 1,002km
	화성-19형 (고체연료)	· 첫 시험발사('24.10): 최고고도 7,687km, 비행거리 1,001km · 북한은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무기로 표현 · 다수의 MIRV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고체연료 ICBM으로 평가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8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 및 위협

화성-19형 (3단 고체연료 ICBM)

-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무기체계**로 표현
- 첫 시험발사('24.10): 최고고도 7,687km, 비행거리 1,001km로 85분 56초 비행
- ※ 정정 고도가 화성-18형 3차 시험 때보다 **1,100km 이상 높아졌고 비행시간도 12분 이상 늘었기** 때문에 화성-18형보다 추력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추정
- 새로운 화성-19형 개발은 화성-18형 페이로드 늘려 다탄두 재진입체 수량을 늘리고자 함.
- 북한은 **다수의 MIRV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초대형 고체연료 ICBM을 운용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효용성과 함께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갖고자 함.



화성-18형 (TEL 9축)	2차 시험발사(2023.07.12.)	3차 시험발사(2023.12.18.)
	1,001km(6,648km)/74분51초	1,002km(6,518km)/73분35초
화성-19형 (TEL 11축)	1차 시험발사(2024.10.31.)	
	1,001km(7,687km)/85분56초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9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 및 위협

극초음속 미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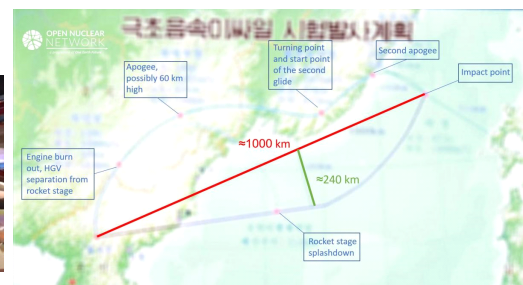
- 북한은 완전한 극초음속 무기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지만 **6차례 시험발사를 했으며, 미국령 끝까지 타격할 수 있는 IRBM급 고체연료 2단 미사일을 3차례 비행시험했을 정도로 빠르고 정교하게 고도화되고 있음.** ← '저고도 활공 및 강한 선회 회피기동' 능력
- HGV에 대한 용어 사용도 명확해짐. 액체연료 부스터를 사용했던 3차 시험발사('22.1.)까지 HGV를 델타윙형(활공형)과 원뿔형 구분없이 극초음속 활공전투부로 표현했으나, 4차('24.1.) 부터는 델타윙형과 원뿔형을 각각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와 '극초음속 기동형조종전투부'로 명확히 구분해 사용



원뿔형



델타윙형



3차 비행시험('22.1)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10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 및 위협

극초음속 미사일

구 분		설 명
1차('21.9.)	액체 연료	1단 부스터는 화성-12형 1단 로켓과 유사하나 짧고 탄두부 형상은 활공에 유리한 델타윙형 - 앰폴 미사일 연료 계통은 연료 주입 없이 발사할 수 있어 군사적 효용성 큰 진전 - 비행거리/고도(합참): 200km/30km
2차('22.1.)		- 부스터는 1차 발사와 동일하나 탄두부 형상은 델타윙 → 원뿔형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비행구간에서 120km를 측면기동하여 700km에 설정된 표적 명중” “다계단 활공도약 비행과 강한 측면기동을 결합한 활공비행전투부의 조종성과 안정성 검증”
3차('22.1.)		- 극초음속 미사일 형상(부스터 HGV)이 2차 시험과 유사함에도 활공 및 측면기동 능력 강화 “600km 계선에서 활공 재도약하며 240km 강한 선회비행을 수행하여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 명중” - 이 선회비행은 400km 이상 벗어난 다른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것으로 오판을 유도하는 회피기동 능력 획득 의미
4차('24.1.)	고체 연료	- 원뿔형 HGV(극초음속 기동형조종전투부)를 장착한 RBM급 신형 2단형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 극초음속 기동형조종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신형 다단 대출력 고체연료 추진체의 신뢰성 확증 목적
5차('24.4.)		- 신형 델타윙형 HGV를 장착한 신형 IRBM ‘화성포-16나(화성-16-나)’ 시험발사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가 1차 정점고도 101.1km, 2차 정점고도 72.3km로 비행하여 1000km 떨어진 수역 탄착”
6차('25.1.)		2024년 4월 시험 발사한 화성-16나와 외형이 유사하나 새로운 소재(탄소섬유복합재료)와 기술(유도조종)을 적용한 개량형 1차 정점고도 98km, 2차 정점고도 42.5km로 1,500km 계선의 공해상 목표가상수역 탄착 5차 시험보다 2차 정점고도가 72.3km → 42.5km로 낮아진 것은 상당한 기술적 진전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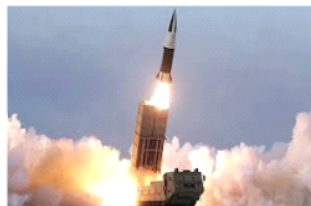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 및 위협

신형 전술유도무기

- 북한은 2019년부터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단거리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지속적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 고도화 및 운용 능력을 높이고 있음.
- ※ 최소 시험발사 횟수('25.3.31. 기준) : KN-23(15회), KN-24(12회), KN-25(17회)
-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는 대표적인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위협
- 특히 KN-23과 KN-24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무기체계로, 우려되는 것은 전쟁 상황의 가혹한 실전 사용 경험의 환류를 통한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임.



KN-23



KN-24



KN-25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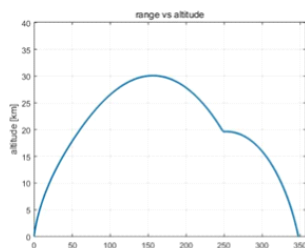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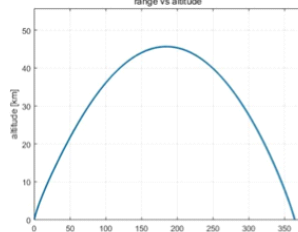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 및 위협

신형 전술유도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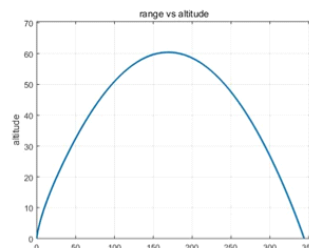
구분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북한판 에이태킴스)	KN-25(초대형방사포)
최대사거리	900km+	400km+	400km
특성	최고고도가 50km 이하며 중간단계에서 30km 이하의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 탐지추적과 요격이 제한	최고고도 50km 이하의 낮은 고도로 포물선 비행하나, KN-23과 유사한 풀업기동 가능성 제기 최대사거리가 410km로 KN-23보다 훨씬 짧음.	정상발사탄도형비행궤적으로 탐지용이 초기 KN-25 발사대는 4연장 이었지만 5연장, 6연장 확대 한 발사대에서 수분 이내 4~6발의 발사체를 연속 발사하고, 동시 포화 공격이 가능해 완전한 방어 한계



KN-23



KN-24



KN-25

출처: 신형전술 유도무기 비행궤적 모의 결과 (권용수, 2025)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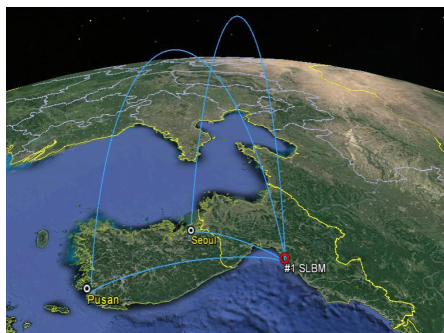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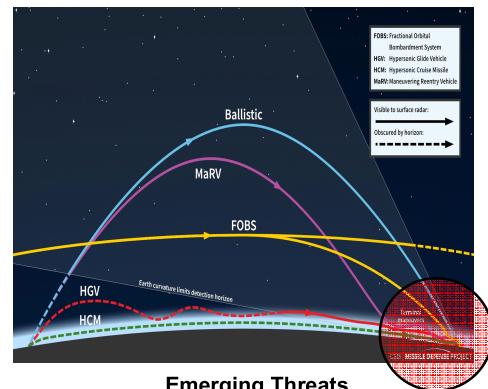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 및 위협

섞어쓰기(극초음속무기 + 재래식 탄도미사일 + 신형 전술유도무기) 공격 가능성

-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한 신형 전술유도무기(KN-23, KN-24, KN-25 등)와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섞어쓰기 형태 공격임.
-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전략자산과 군사목표에 대해 수직·수평의 다차원적 동시공격을 하는 경우, 첨단 미사일방어체계일지라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음.



Conventional Threats



Emerging Threats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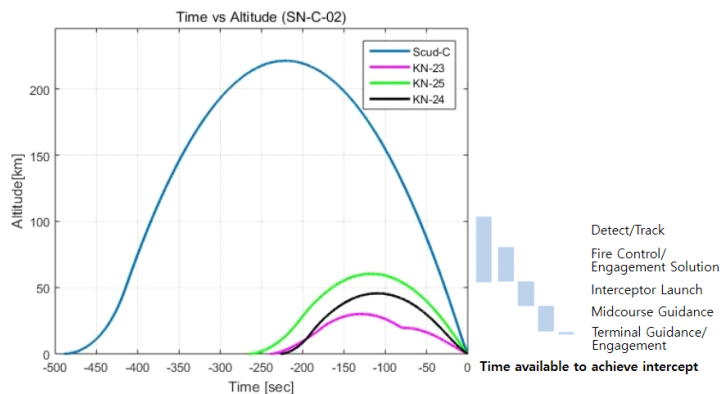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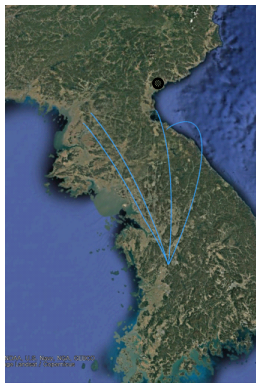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14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 및 위협

가상 모의 시나리오

- 공격 방식 : 섞어쓰기 공격
- 공격 무기 : KN-23, Scud-C, KN-24, KN-25
- 섞어쓰기 방식의 동시 다차원적 공격은 KAMD에 대한 심각한 도전



출처 : 신형전술 유도무기 비행궤적 모의 결과 (권용수, 2025)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15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한국형 3축체계 개념

- 한국형 3축체계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거부적 및 응징적 차원의 실질적 억제력을 갖기 위한 한국군의 핵심 능력과 태세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으로 구성
-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립되었던 한국형 3축체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포괄적 의미의 '핵·WMD 대응체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킬체인과 KMPR도 각각 '전략표적타격'과 '압도적 대응'으로 변경.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형 3축체계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킬체인과 KMPR도 복원
-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단계별 진화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체계 구축/운용에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비용,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등 복잡한 문제와 한계가 존재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16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킬체인(Kill Chain) 한계

- 탐지 및 정보 수집 역량 제한
 - 현 한국군의 독자 감시·정찰자산과 역량만으로 북한 이동식 발사대의 실시간 탐지에 한계
 - '23년부터 독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추가 획득이 계획되어 있으나, 상당한 부분을 미국의 정찰위성이나 한미 연합 정보자산에 의존
 - 북한이 산악지형과 지하 시설을 이용해 미사일을 은폐할 경우, 탐지 및 정보 수집 한계
- 신속한 타격 결심의 구조적 한계
 - 선제타격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군사적 판단뿐만 아니라 외교·정치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적 한계
- 북한 미사일 고체연료화 및 발사 플랫폼 다양화 등 선제타격 성공의 부정적 요인
 - 신형 전술유도무기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등의 고체연료화
 - KN-23 발사 플랫폼 : 지상이동형(차륜형, 궤도형) → 열차, 저수지 수중바지, 잠수함, 간이사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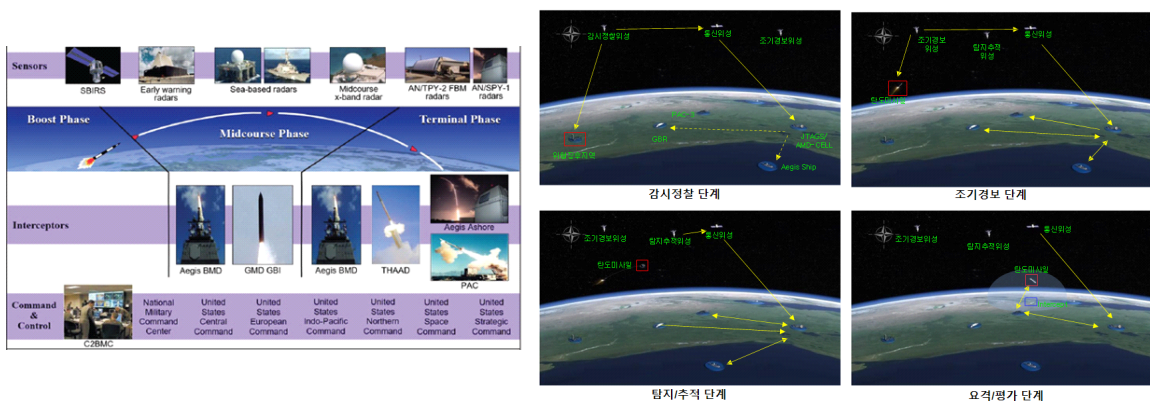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계

- 탄도미사일방어(BMD) 속성
 - 위협 특성상 단일군/단일국가의 방어자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합동·연합작전
 - BMD 시스템은 가용한 모든 자산(센서, C2BMC, 슈터)이 정보그리드 하에서 통합되어 단일 시스템처럼 동시에 운용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전구작전 복합시스템



출처 : 권용수, 우주센서 기반의 탄도미사일방어, 2014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2014.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계 (계속)

- 복잡한 구조적 문제
 - 천문학적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기술 한계,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MD 참여에 대한 상단된 여론 등 복잡한 문제로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추진
 -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과거 및 현재의 TMD 및 MD 참여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었으며, 동맹국/우방국과의 협업을 기반의 체계적인 개념연구가 부족하고 상위전략 차원의 대응 전략과 지침이 불명확
 - KAMD가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 종말단계 지역방어로는 고도화된 전방위 위협에 한계
 - 북한이 저고도 변칙 회피 기동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쓰기 형태로 동시 다차원적 공격을 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
 - 다양한 위성(통신, 감시정찰, 조기경보, 탐지추적) 기반 미사일방어작전 수행 한계
 - PAC-3와 천궁-II 등과 같은 종말단계 하층방어 중심의 요격체계를 운용하지만, L-SAM에 이어 SM-3를 전력화하기 전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는 경우 요격 한계
- ※ 동맹국/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업/협동 기반 미사일방어 구축 및 운용 필수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19

맺음말

- 북한 핵미사일의 급격한 기술 고도화와 위협은 현실이며,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는 위중한 안보상황이다.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전략/전술에 따라 복잡위협(complex threats)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효과적 대응이 쉽지 않다.
- 이것은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운용에 심각한 도전이다.
- 핵탄두 탑재를 전제로 한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과 핵사용을 가정한 훈련은 진행 중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재래식 전술무기 수준의 군사적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핵 능력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진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감사합니다.

20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5.4.10)

권용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20

19th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1세션: 트럼프 2.0 시대와 한미의 대북 억제력 위기

발표 4

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조동준, 홍예림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

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對韓)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홍예림(버지니아대)·조동준(서울대)

초록

이 글은 설문실험을 통해 (1) 한국인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효과를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지 않으며, (2) 미래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대북억제 또는 대한보장의 수단보다는 현재 매몰비용을 치르는 수단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보인다. 이 결과는 미국의 대북억제/대한보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북한발 위협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미국이 연루위험을 피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효과가 약화된다는 일반적 예상과 다르게, 한국인은 북한발 위협의 정도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을 평가한다. 둘째, 연합군사훈련 또는 주한미군주둔과 같이 사전 대응조치가 위기 발생 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는 언술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주제어: 억제, 보장, 확장억제, 남북관계, 신호이론, 실험연구

I. 들어가며

한미 양국의 공식적 언사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믿음직하다. “철통 같다,” “굳건하다,” “강력하다,” “어느 때보다 좋다,” “핵심축이다” 등 수많은 표현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대북억제조치에 신뢰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과 핵잠수함 기항 등을 통하여 대북억제조치가 유사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이와 같은 수사와 실질적 조치의 효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나타난다. 대부분 한국인은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대북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인식한다.¹⁾ 한미동맹을 둘러싼 수사, 실질적 조치, 여론조사는 모두 미국의 대북억제/보장의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믿음을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용하는 대북억제조치/대한보장조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시점이나 혹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했을 때 국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한미동맹 위기와 연관시키고 미국 대북억제조치의 효과성에 의구심을 보였다.²⁾ 특히, 북한의 핵능력 증대와 맞물려, 안보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 미국의 방위공약 이행을 의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극단적 표현이지만, “미국이 서울과 도쿄를 지켜주기 위하여 LA와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와 같은 질문이 공개적 자리에서 언급

* 홍예림(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조동준(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교신 저자). 논문을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이 글은 <통일과 평화> 16집 3호에 게재되었다.

1) 제임스 김·강충구·함건희,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아산정책연구원(2022년 5월), 24-26쪽. 한편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여론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가 세대나 이념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나이나 정치이념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간 상관관계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어 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우정엽·이성원, “한국 국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 변화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3호(2015), 45쪽).

2) 조영빈,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 한미동맹 회의론 근거 있다,” 『한국일보』 2021년 8월 19일.

된다.³⁾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국내 학계는 두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기존 동맹 이론을 기반으로 한미동맹의 현황이 분석된다. 동맹 이론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방기-연루(abandonment-entrapment) 모델을 한미동맹에 적용하여 현안을 분석하거나 혹은 동맹의 지속 및 쇠퇴 요인에 대한 기존 문헌의 기준을 한미동맹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⁴⁾ 둘째, 한미동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여론조사가 지속되어 왔다. 그간 누적된 여론조사 데이터는 한미동맹 혹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한미동맹/한미협력에 기반한 대북억제 및 대한보장 관련 기존 여론조사는 크게 세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북한발 위협의 강도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 위협 강도의 변화가 동맹이 작동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론적 이해가 상식으로 공유되지만, 구체적으로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관계의 신뢰성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이루어지 않았다. 둘째, 한미동맹/한미협력에 기반한 대북억제/대한보장의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대북억제조치와 대한보장조치가 여러 유형으로 세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유형별 한국인의 신뢰를 파악하지 못했다. 셋째,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수동적인 혹은 반응적이라고 간주되었다. 한국인의 인식이 한미동맹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탐색되지 않았다.

이 글은 2022년 4월에 수집한 설문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1) 북한발 위협의 변화에 따라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대한보장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북한발 안보위협이 미국의 연루위험을 높여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대한보장의 효과가 떨어지는 인과사슬을 한국인이 인식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2) 대북억제/대한보장의 유형별 효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신호이론에 따라 미국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을 유형화하고 대북억제/대한보장과 관련된 정책 수단이 각각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확인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후견국과 잠재적 적대국 간 관계를 신호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후견국은 잠재적 적대국을 향하여 유사시 보복으로 큰 대가를 치르거나 도발이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피후견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는데, 이는 후견국이 보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이 글이 설정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성한 설문실험(survey experiment)의 구성 과정 및 변수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위협의 강도 변화가 미국의 대북억제/대한보장의 신뢰성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신호이론에 따라 유형화된 대북억제/대한보장의 효과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설계를 소개한다. 셋째, 설문실험을 통하여 드러난 미국의 대북억제/대한보장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을 정리한다. 또한, 대북억제/대한보장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토한다.

3) 황대진·양승식, “美, 북한의 ‘LA핵공격’ 감수하면서까지 서울 지키겠다,” 한국일보, 2017년 8월 1일.

4) 나승학,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Stephen M. 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2015), 161-180쪽; 조운영, “미래의 한미동맹과 미국의 역할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8권 1호(2004).

II. 기존 연구 검토

확장억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논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후견국이 피후견국의 안보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가 확장억제에 기여하는지 여부이다. 이 연구의 흐름은 신호이론(signaling theory)과 결합되어 후견국, 피후견국, 적대국 간 관계에서 후견국의 조치를 피후견국 보호를 위한 결의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피후견국의 입장에서 후견국의 조치에 대한 신뢰를 탐색하는데, 국가 수준의 분석은 물론 시민의 마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일반 시민이 외교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민주국가에서는 후견국의 조치에 대한 여론이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과 확장억제를 연결시키는 연구가 진행된다. 이 절은 확장억제와 동맹국의 약속의 신뢰성에 관한 두 연구 흐름을 정리한다.

1. 신호이론과 확장억제

확장억제에 관련된 후견국, 피후견국, 그리고 잠재적 적대국 간 관계는 동맹관계와 적수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잠재적 적대국과 후견국간 적수관계에서는 잠재적 적대국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진행되며,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동맹관계에서는 후견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둘러싼 보장게임이 진행된다. 따라서 적대국 억제와 피후견국에 대한 보장이 모두 충족될 때, 확장억제가 온전히 작동된다. 반면 적대국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피후견국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거나 피후견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적대국의 도발 위험성을 높인다면,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⁵⁾

신호이론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행위자 간 신호전달의 신빙성이 신호 창출과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거짓 정보가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확장억제를 둘러싼 후견국, 피후견국, 잠재적 적대국 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신호이론은 억제를 위한 조치와 피후견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를 상대방에게 정보 또는 결의를 전달하는 신호로 해석한다. 즉, 억제조치와 보장조치를 취하는 후견국이 자국의 결의와 능력을 알지만 잠재적 적대국과 후견국이 이를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후견국은 자국 조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속 불이행 시 치러야 할 비용을 높이거나 위기 발생 전 연합훈련과 같이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신호의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 반면, 잠재적 적대국과 피후견국은 수신된 신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⁶⁾

확장억제 게임에 신호이론을 적용한 기존 연구는 두 측면에서 약점을 가진다. 첫째, 후견국의 신호가 적대국 억제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 연구대상이지만, 후견국의 조치가 억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상충적 연구 결과가 병립한다. 예를 들어, 연합군사훈련이 적대국을 억제하

5) James D. Fearon, "Signaling versus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ests: An Empirical Test of a Crisis Bargaining Mod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38, no.2(June 1994), p.245; Roseanne W. McManus and Keren Yarhi-Milo, "The Logic of 'Offstage' Signaling: Domestic Politics, Regime Type, and Major Power-Protégé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71, no.4(April 2017).

6) 조동준, "북한의 핵능력 증가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주는 함의와 대처방안," 국가안보전략 제3권 (2017), 276-279쪽; 조동준,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 127-129쪽; James D. Fearon,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1, no.1(February 1997), p.70; Matthew Fuhrmann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8, no.4(April 2014), pp.921-924.

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측면이 있지만, 잠재적 적대국의 반발로 피후견국의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⁷⁾ 해외 핵무기 배치와 핵보유국과의 동맹조약이 억제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았다.⁸⁾

둘째, 억제와 보장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기존 안보 연구들의 관심 주제와 대상은 잠재적 적대국의 도발 억제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후견국의 안보에 대한 보장게임에 관해서 원론적 해법과 정책 제안이 제시된다.⁹⁾ 후견국의 관점에서는 억제게임이 보장으로 일방향으로 이어지지만, 피후견국의 관점에서는 억제게임과 보장게임은 쌍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존 연구가 후견국의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어, 억제게임과 보장게임 간 연결이 탐색되지 않았다.

2. 미국의 대한보장에 관한 한국의 신뢰

동맹을 맺은 국가는 상대국에게 제공하는 안보공약의 크기와 수단을 계산하는 동시에 상대국으로 받는 안보공약의 크기와 수단을 계산하면서, 동맹관계를 운영한다. 즉, 안보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최초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도 동맹국 사이에는 안보공약의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상호작용이 계속 진행된다. 동맹이 유지되는 동안 동맹국 간 안보의 수요와 공급이 외형적으로 고정된 듯 보이지만, 실상 동맹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국력 차가 존재하는 비대칭 동맹에서 피후견국을 안보 수혜자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지만,¹⁰⁾ 피후견국도 특정 영역에서 후견국으로 안보 혜택을 요구하는 동시에 다른 영역에서는 후견국에게 안보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맹을 관리한다.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보장에 관한 한국인의 신뢰를 탐색하는 기존 연구는 세 측면에서 약점을 보인다. 첫째, 기존 연구는 피후견국 한국의 속성이 고정되어 있고 한국이 한미동맹의 피동적 수혜자로 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 조치와 보장조치가 선행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탐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7) Jordan Bernhardt and Lauren Sukin,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Crisis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65, no.5(May 2021); Raymond Kuo and Brian Dylan Blankenship, "Deterrence and Restraint: Do Joint Military Exercises Escal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66, no.1(January 2022). 전자는 북한을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도발적인 수사와 행동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했으며, 반면 후자는 군사훈련이 확전의 개연성을 오히려 낮춘다고 주장하였다.

8) Fuhrmann and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pp.919-935; Paul C. Avey, "The Historical Rarity of Foreign-Deployed Nuclear Weapon Crises," *Security Studies* vol.27, no.1(January-March 2018), pp.89-119; Brett Ashley Leeds, "Do Alliances Deter Aggression? The Influence of Military Alliances on the Initiation of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7, no.3(July 2003), pp.427-439; Jesse C. Johnson and Brett Ashley Leeds, "Defense Pacts: A Prescription for Peace?" *Foreign Policy Analysis* vol.7, no.1(January 2011); Thorin M. Wright and Toby J. Rider, "Disputed Territory, Defensive Alliances and Conflict Initi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31, no.2(April 2014).

9)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의 신뢰 변화를 살펴본 문헌들은 동맹 이론에 기반한 현상 분석이나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들은 기존 이론들의 가정과 전제 조건을 살피고 이를 한국의 맥락에 맞추어 시의적절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요인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즉, 이론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드물었고, 정책 분석 중심의 연구들은 미국의 일부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를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 수준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웠다.

10) McManus and Yarhi-Milo, "The Logic of 'Offstage' Signaling: Domestic Politics, Regime Type, and Major Power-Protégé Relations," p.705.

런 경향은 안보와 관련된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약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한국 내 민주화가 심화되면서 외교정책도 여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맹관리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이 동맹관리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한미 간 동맹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연구는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조치와 보장조치 중 일부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존 문헌은 주한미군의 주둔 혹은 연합군사훈련과 같이 대중에게 가시적으로 인식되는 정책이 개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다양한 정책수단이 가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특정 수단의 효과에 집중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공약의 효과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원론적으로 동맹이 가져오는 안보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동맹국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¹¹⁾

셋째, 북한발 위협이 한미 간 동맹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지 못했다. 위협(threat)은 안보 영역, 특히 동맹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에 따라 많은 동맹 연구자들이 위협을 동맹 형성 및 종결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였다.¹²⁾ 이 논리를 확대하면, 동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적대국발 위협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동맹의 결속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동맹 아래서도 위협 수준의 변화가 동맹 관리 혹은 동맹 내 협상 (intra-alliance bargaining)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I. 연구설계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수단에 따라 변화하는지 여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북한발 위협 강도에 따라 변화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설계를 소개한다. 가설의 도출과정, 주요변수, 실험설문의 구상, 실험설문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정리한다.

1. 가설

이 연구는 후견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보장에 대한 피후견국 시민의 인식 변화가 후견국의 약속에 대한 일방향적 반응이 아니라 후견국이 사용하는 수단과 적대국의 위협 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 전제 아래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북한의 위협 강도와 수단에 따라 변화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인식이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한미관계에 투영되는 긴 인과사슬 중 초반 인과사슬에만 집중한다.

이 연구는 두 가설을 검증한다. 첫째, ‘신호 유형 가설’은 대북확장억제(對北擴張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의 수단이 대북억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유형별로 다르다고 예상한다. 대북확장억제의 효과에 대한 포괄적 인식에 집중하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이 연구는 미국이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사용하는 수단이 달라짐에 따라 대북억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한국인의 인식이 달라진다고 예상한다. 실제 미국이 사용하는 대북억제와 대남보장의 수단별 효과

11) Ibid., p.704.

12)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39, no.1(March 1997); Jesse C. Johnson, “External Threat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61, no.3 (May 2017).

를 개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호이론에 기반하여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조치를 북한과 한국에 보내는 신호로 이해하고, 신호를 ‘매몰비용 신호’, ‘양자 청중비용 신호’, ‘다자 청중비용 신호’로 유형화한다. 이는 신뢰의 신뢰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후 발신자가 치러야 할 고통 또는 신호에 담긴 정보를 만들기 위하여 치러야 할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신호이론에 따른 유형화이다.¹³⁾

‘매몰비용 신호’는 잠재적 적대국의 실질적 위협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비용을 발생시켜 동맹약속 이행의 결의를 보이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데, 주한미군 주둔이나 연합군사훈련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청중비용 신호’는 후견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할 국내외 평판 하락, 청중의 정치적 처벌 등과 관련된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데, 피후견국에 대한 후견국만의 약속과 관련될 경우 ‘양자 청중비용 신호’로, 후견국과 다른 여러 국가가 피후견국에 관여하는 약속과 관련될 경우 ‘다자 청중비용 신호’로 분류한다.

‘매몰비용 신호’는 피후견국과 잠재적 적대국 간 분쟁이 악화되기 이전에 적대국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정책들보다 더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인은 세 유형 중 미국의 안보 공약의 이행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몰비용 신호’를 가장 높게 높은 신뢰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 그 다음으로 청중비용 정책 중에서는 미국이 한국에게 직접적으로 동맹 약속 이행 의도를 전달하는 ‘양자 청중비용’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표현하는 ‘다자 청중비용’보다 한국인에게 더 높은 신뢰를 주리라고 추론한다. 이는 미국의 양자적 의사소통 방식이 다자적 방식보다 문제해결에 더 효율적이라고 믿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상대국의 약속 이행을 감시 및 제재하는 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다자정책이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¹⁴⁾

가설 1-1(‘신호 유형 가설’ 1): 한국인은 미국의 ‘매몰비용 신호’가 ‘청중비용 신호’보다 대북억제에 더 도움을 준다고 인식한다.

가설 1-2 (‘신호 유형가설’ 2): 한국인은 미국의 ‘양자 청중비용 신호’가 ‘다자 청중비용 신호’보다 대북억제에 더 도움을 준다고 인식한다.

둘째, ‘위협 가설’은 북한발 위협의 강도가 높을수록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낮아진다고 예상한다. 확장억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적성국의 위협 강도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하여 불명확하다. 피후견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이 높을수록 적성국의 도발을 막기 위하여 후견국이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낸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다.¹⁵⁾ 반면, 적대국의 위협이 후견국에까지 미친다면, 후견국이 피후견국의 안보를 위하여 취하는

13) 본 논문에서 구분한 신호 유형은 제임스 피어론(James Fearon)이 제시했던 매몰비용(sunk cost)와 손뭉기 비용(tying-hands cost)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매몰비용’이라는 용어가 국내학계에서 자주 활용되지 않지만, 공식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다(Fearon,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pp.68-90).

14) 이재준, “6자회담 실패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2021), pp.69-96.

15) Roseanne W. McManus and Mark David Nieman, “Identifying the Level of Major Power Support Signaled for Protégés: A Latent Measure Approa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56, no.3 (May 2019), pp.364-78). 반면, 후견국의 억제조치가 적성국을 자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후견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 시민의 신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조치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분쟁으로 끌려 들어갈 위험으로 인하여 피후견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¹⁶⁾ 기존 연구에서는 적성국발 위협이 확장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충적이지만, 최근 북한발 위협강도의 증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한국내에서 강해지고 있다.

적대국의 위협 증가로 인하여 후견국의 억제와 보장조치에 대한 의문이 피후견국 시민의 인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적대국이 직접 후견국을 공격할 정도로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적대국과 피후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후견국이 적대국과 직접 교전하는 위험을 피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후견국이 피후견국을 매개로 일어나는 연루의 위험을 피하려 한다면 피후견국은 방기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피후견국 시민의 마음에서도 동맹관리에서 연루와 방기의 위험이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적대국의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후견국의 강력한 조치가 잠재적 적대국을 자극하여 위기 강도가 올라가고 피후견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으로 끌려들어갈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003년 2월 13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다른 것은 달라야 하고, 다른 것은 조율해 전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는데,¹⁷⁾ 이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억제조치로 인하여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으로 이끌려 들어갈 위험을 피하려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가설 2 (‘위협 가설’): 북한의 위협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국인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 한보장의 효과를 낮게 평가한다.

2. 분석단위와 자료

이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다.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을 통해 확보한 915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주 간 설문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¹⁸⁾ 주요 연구 대상인 후견국은 미국, 피후견국은 한국, 잠재적 적대국은 북한으로 대입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방법론은 실험 설계 중 집단 간 설계(between-subjects design)를 활용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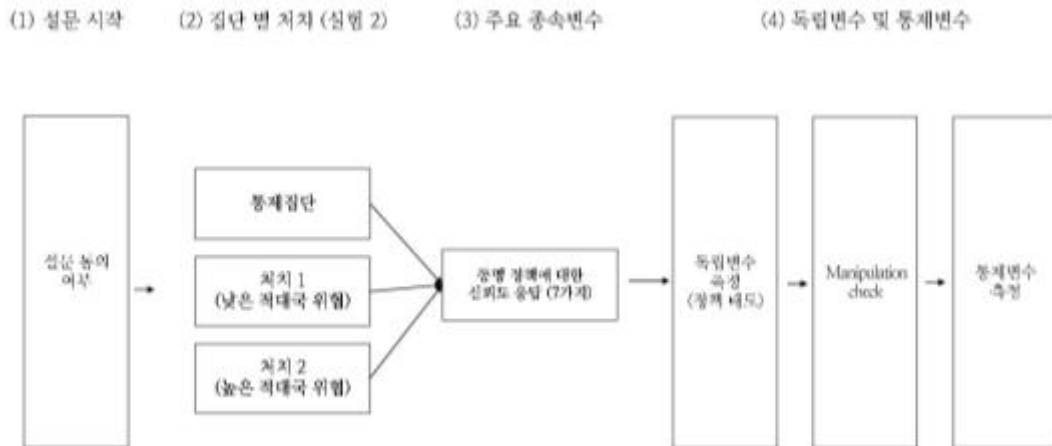
16) 예를 들어, 구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프랑스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의구심을 품고 자체 핵무장을 모색하였다.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선제공격이 있다면, 미국이 공멸의 위험을 초래하는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63년 1월 14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핵능력이 유럽과 프랑스와 관련된 모든 일에 바로 필연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며 프랑스의 독자 노선을 필요성을 옹호했다[Charles de Gaulle, "Conférence de presse du 14 janvier 1963 (sur l'entrée de la Grande-Bretagne dans la CEE)," Charles de Gaulle-paroles publiques <<https://fresques.ina.fr/de-gaulle/accueil>>].

17) 소중섭, “노무현 당선자의 대미 발언록,” 『시사저널』 1829호 2003년 11월 2일.

18) 본 설문의 처치효과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연구 디자인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기 전 10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사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파일럿 분석에서 수정된 버전의 설문지를 본 조사에서 활용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저자들이 직접 확보한 서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한민국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총 1회의 사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확보한 표본 100명을 대상으로 1회 사전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차례 사전실험에서 얻는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설문지와 실험 설계를 확정된 후 2022년 3월 22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실험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 본 실험은 2022년 4월 11일에서 15일까지 총 5일 동안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를 통해 확보한 대한민국 성인남녀 91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자료 수집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19) 집단 간 설계는 표본 내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차이를 확인한다. 반면 집단 내 설계(within-group design)는 처치 제공 전과 후에 각각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을 설정하여 처치효과를 확인한다.

<그림 1> 실험 순서도



3. 실험 처치: 상이한 북한발 위협 정보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사를 기반으로 처치변수를 설정한다.²⁰⁾ 구체적으로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위협 수사를 활용하여 낮은 수준의 위협을 담은 정보와 높은 수준의 위협을 담은 정보를 처치변수로 설정했다. 북한발 위협 정보를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적절한 맥락(politically relevant context)을 포함하였다.²¹⁾

처치변수는 세 집단에게 다르게 적용되었다. 먼저 915명의 전체 응답자를 임의화(randomization) 과정을 통해 각 305명을 ‘통제집단, 처치집단1, 처치집단2’로 분류하였다. ‘통제집단’에게는 아무런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처치집단1’에는 북한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낮은 수준의 위협 정보를 제공했는데, 2022년 1월에 보도되었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및 미국의 대응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수정한 문안을 사용했다.²²⁾ ‘처치집단 2’에게는 높은 북한발 위협 정보를 제공했는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및 미국의 대응에 대한 북한의 발언과 함께 1차 핵실험 다음 해인 2007년 핵실험에 대한 자부심과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신년 공동사설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²³⁾ 이처럼 통제집단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처치집단1’에게

20)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보에 대한 설문 실험을 진행했던 기존 연구들은 많은 경우 가설적 시나리오(hypothetical scenario)를 활용하여 처치를 제공하였다. 가설적 시나리오란 현실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만약 특정한 일이 발생한다면(what if)?’이라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사고를 통해 구성된 가상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설적 시나리오의 활용은 명확한 장점과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점은 높은 처치 효과를 얻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현실과 다소 거리감 있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실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만큼 동시에 외적 타당성을 희생하게 된다. 즉, 실제 상황과 거리감 있는 가상의 정보를 통한 처치 효과는 현실에 대한 보편화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활용될 개연성이 낮아진다.

21) James N. Druckman, Donald P. Green, James H. Kuklinski and Arthur Lupia,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00, no.4(November 2006), p.629.

22) 이제훈, “북 “극초음속미사일 1000km 표적 명중”...김정은, 1년 10개월만에 참관,” 『한겨레』 2022년 1월 12일.

23) 통일연구원,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1(2007).

는 낮은 수준의 북한발 위협 정보, ‘처치집단2’에게는 높은 수준의 북한발 위협 정보를 제공한 후,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표 1> 실험 처치 정보

분류	텍스트	N
통제	없음	305
처치 1 (낮은 위협)	북한은 지난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후 6일만인 11일 오후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대북독자 제재 및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 추가 등 대응수위를 높이자, 김정은 위원장은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듣고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이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성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들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305
처치 2 (중간 위협)	북한은 지난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후 6일만인 11일 오후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대북독자 제재 및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 추가 등 대응수위를 높이자, 북한 외무성은 "미제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수들의 핵전쟁 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드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제재, 봉쇄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모든 장병들이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과 격동상태를 견지하여 조국의 전초선을 철옹성같이 지키며 미제 침략자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무자비하게 격파 분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05

4. 종속변수: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신뢰

종속변수는 미국이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을 위해 실제 사용하는 일곱 개 수단의 효과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매몰비용 신호’에 대한 신뢰는 “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주둔”이 대북억제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평가로 측정된다. ‘양자 청중비용 신호’에 대한 신뢰는 ‘강력한 대북선언’과 ‘핵 사용 가능성 시사’가 주는 대북억제 효과에 관한 신뢰값, ‘다자 청중비용 신호’에 대한 신뢰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추진,’ ‘6자회담 추진,’ ‘가치(인권, 민주주의) 중심 동맹 강화’가 주는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이다. 문안은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과 도발 공격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귀하는 미국의 특정 수단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얼마나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선택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5) 사이 총 5개로 구성된다.

IV. 분석 결과

이 절은 실험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7개 대북억제 또는 대한보장의 효과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설문에 관한 응답을 정리한다. 이후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북한발 위협 수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다.

1. 매몰비용 vs. 청중비용

<표 2>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7가지 수단의 효과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보여준다.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7가지 조치가 대북억제에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한국인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준거집단의 통계치를 보면, 7개 항목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 또는 “도움이 된다”를 선택한 비중이 50%를 넘는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과 연합군사훈련의 대북억제에 대하여 한국인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핵사용 시사와 강력한 대북선언이 대북억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대북억제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응답이 40% 이상 된다. 이 결과는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의구심을 가진 한국 내 집단이 강력히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2> 처치집단별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효과에 대한 인식

처치집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 비율 (%)		
				도움 안됨	효과 없음	도움됨
통제	강력한 대북선언	3.40	1.20	24.59	17.70	57.70
	핵 사용 시사	3.30	1.30	31.06	16.72	53.11
	유엔 안보리 결의안	3.40	1.16	23.93	21.31	54.75
	6자회담	3.48	1.10	18.69	21.97	59.34
	가치 기반 동맹 강화	3.38	1.10	24.11	25.57	52.46
	연합군사훈련	3.70	1.10	10.00	26.00	63.93
	주한미군 주둔	4.07	0.98	7.21	16.72	76.07
처치 1	강력한 대북선언	3.32	1.13	23.93	24.26	51.80
	핵 사용 시사	3.35	1.22	25.90	21.31	52.79
	유엔 안보리 결의안	3.32	1.09	21.97	25.90	52.13
	6자회담	3.36	1.07	21.31	26.23	52.46

	가치 기반 동맹 강화	3.37	1.11	22.30	25.90	51.80
	연합군사훈련	3.64	1.07	16.72	21.64	61.64
	주한미군 주둔	4.03	0.98	7.54	17.38	75.08
처치 2	강력한 대북선언	3.35	1.07	22.30	25.25	52.46
	핵 사용 시사	3.33	1.16	26.56	20.98	52.46
	유엔 안보리 결의안	3.50	1.05	19.34	21.31	59.34
	6자회담	3.53	0.99	18.03	19.82	62.30
	가치 기반 동맹 강화	3.54	1.08	18.03	24.92	57.05
	연합군사훈련	3.66	1.14	17.38	20.33	62.30
	주한미군 주둔	4.07	0.94	7.54	15.41	77.05

<표 3> 중 북한발 위협 강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은 표본에서 신호유형 별로 대북억제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 두 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은 ‘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주둔’을 포함하는데, ‘강력한 대북선언’과 ‘핵 사용 시사’를 포함하는 양자 청중비용 수반 유형, ‘유엔 안보리 결의안 추진,’ ‘6자 회담 추진,’ 그리고 ‘가치 기반 동맹 강화’를 포함하는 다자 청중비용 수반 유형에 비하여 대북억제 효과가 높다.²⁴⁾ 특히 주한미군 주둔의 효과에 대하여 응답자 중 76%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둘째, 북한발 위협과 관련되어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은 준거집단에서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의 효과와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의 효과 간 차이가 없다. 개별 수단별로 보면,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5개 신호 중 6자회담 추진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이 가장 높고(3.479), 핵무기 사용 시사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3.300)이 가장 낮다.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에 속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추진,’ ‘6자 회담 추진,’ 그리고 ‘가치 기반 동맹 강화’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은 3.421,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에 속하는 ‘강력한 대북선언’과 ‘핵 사용 시사’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은 3.348으로, 두 신호유형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²⁵⁾

<표 3> 동맹 약속 이행 수단(신호유형)에 따른 한국인의 신뢰 (기술통계)

24)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은 3.888,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신호유형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은 3.421,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대북억제의 유형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은 3.348이다.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대한 신뢰값과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대한 신뢰값간 평균 차이의 t -계수는 6.436(p -value = 0.000),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대한 신뢰값과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대한 신뢰값간 평균 차이의 t -계수는 6.151(p -value = 0.000)이다.

25)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대한 신뢰값과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대한 신뢰값 간 평균 차이의 t -계수는 0.879(p -value = 0.190)이다.

처치 집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통제 (N=305)	매몰비용	3.88	0.92		
	양자 청중비용	3.35	1.12	1	5
	다자 청중비용	3.42	0.93		
처치 1 (N=305)	매몰비용	3.84	0.93		
	양자 청중비용	3.33	1.06	1	5
	다자 청중비용	3.35	0.88		
처치 2 (N=305)	매몰비용	3.86	0.95		
	양자 청중비용	3.34	1.00	1	5
	다자 청중비용	3.53	0.83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에 대한 신뢰와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에 대한 신뢰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연구는 추가적으로 두 신호유형에 대한 신뢰 간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7가지 수단 간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표 4>를 보면, 신호유형 내 수단 간 연계성이 높다. 예를 들어,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강력한 대북 선언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과 핵무기 사용 시사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 간 상관계수가 0.607이다.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연합군사훈련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과 주한미군 주둔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 간 상관계수는 0.603이다.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6자회담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과 UN 안보리 결의안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 간 상관계수는 0.577이다. 반면, 동일한 신호유형에 속하는 않는 수단에 대한 신뢰값 간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어,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핵사용 시사 발언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과 6자회담 추진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 간 상관계수는 0.160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은 신호유형 간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각 신호유형의 효과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를 내린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4> 준거집단에서 대북억제/대한보장 수단간 연계성(Pearson 상관계수)

	핵사용 시사	UNSC 결의	6자회담	가치 동맹	군사훈련	미군주둔
대북선언	0.607	0.514	0.330	0.393	0.559	0.377
핵사용 시사		0.367	0.160	0.240	0.579	0.344
UNSC 결의			0.577	0.499	0.474	0.379
6자회담				0.528	0.318	0.360
가치동맹					0.473	0.363
군사훈련						0.603

2. 북한발 위협 강도와 무관한 인식

북한발 도발 강도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수단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북한발 위협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은 준거집단, 낮은 위협을 담은 정보를 접한 처치집단1, 중간 정도의 위협을 담은 정보를 접한 처치집단2 사이 7가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 수단에 대한 신뢰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1>과 <표 2> 참조).²⁶⁾ <표 5>는 7가지 수단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 또한 북한발 위협 정보를 달리하는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북한발 위협 정보를 달리하는 세 개 집단 안에서 신호 유형별 대북억제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은 두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보인다. 첫째, 세 집단 안에서 ‘매몰비용 신호 유형’에 대한 신뢰값은 ‘다자 청중비용 신호 유형’과 ‘양자 청중비용 신호 유형’에 비하여 일관되게 높다(<표 2>와 <표 3> 참조). 매몰 비용을 수반하는 신호 유형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는 북한발 위협 강도와 무관하다고 해석된다. 둘째, 세 개 집단 안에서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 유형에 대한 신뢰값이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 유형에 대한 신뢰값보다 일관되게 높으며, 북한발 높은 위협 정도를 받은 집단 안에서는 양자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처치집단2에서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 유형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은 3.527이고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 유형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은 3.339로, 양자 간 차이 t -계수는 2.5216(p -value=0.006)이다. 북한발 위협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미국의 대북 보복조치가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예상으로 인하여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수단을 선호하게 된다고 추정된다. 즉,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는 “말폭탄”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인의 인식 안에 있다는 의미다.²⁷⁾

<표 5> 집단과 대북억제/대한보장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

집단별 기술통계					
집단		평균	표준편차	관측수	
통제(북한발 위협 정보 없음)		3.532084	0.81073	305	
처치1(북한발 저강도 위협)		3.485714	0.78602	305	
처치2(북한발 중강도 위협)		3.569087	0.74910	305	
분산분석결과					
Source	SS	df	MS	F	Prob > F
Between groups	1.064481	2	0.53224	0.87	0.4195
Within groups	12530.1	912	0.61209		
Total	559.2886	914	0.61191		

26) ‘강력한 대북선언’의 경우 세 집단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0.87(p -value 0.420), ‘핵 사용 시사’의 경우 세 집단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0.13(p -value 0.881),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세 집단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2.07(p -value 0.127), ‘6자 회담’의 경우 세 집단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2.10(p -value 0.124), ‘가치 기반 동맹 강화’의 경우 세 집단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2.31(p -value 0.010), ‘연합군사훈련’의 경우 세 집단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0.19(p -value 0.830), ‘주한미군 주둔’의 경우 세 집단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0.16(p -value 0.85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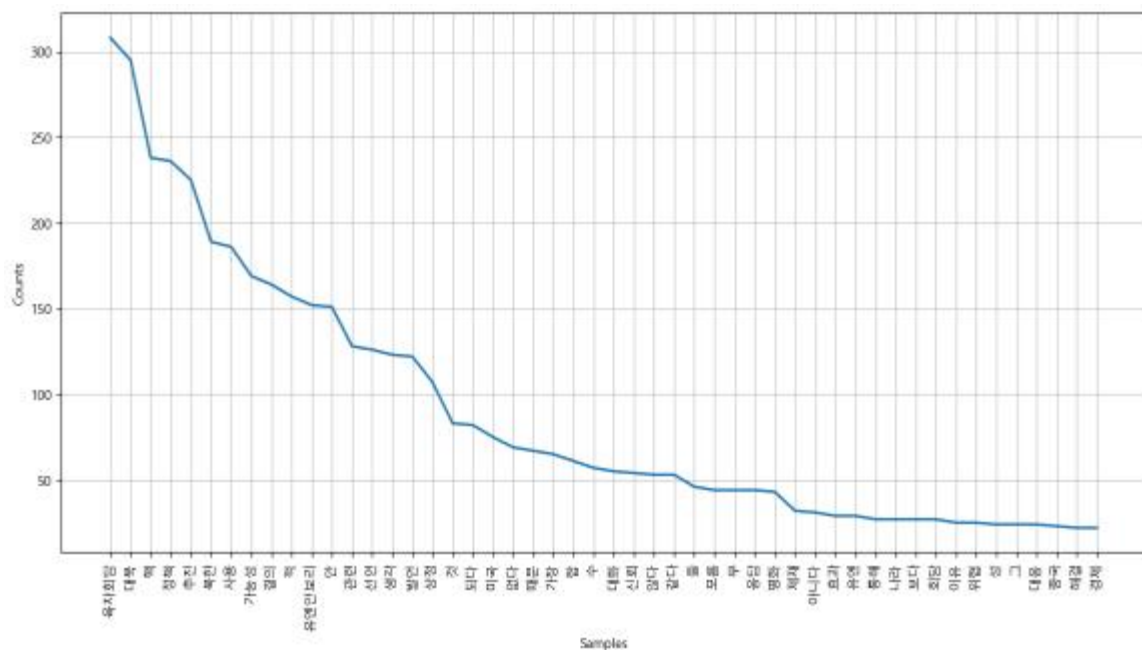
27) 김윤형, “하루새 말폭탄 주고받은 북-미…‘한반도 평화’ 재개 차질 우려,” 『한겨레』 2021년 3월 18일; 김진욱, “北 격해지는 말폭탄, 행동으로 옮길까... ‘적대국’ 南 겨냥 무기는,” 『한국일보』 2024년 2월 18일.

북한발 위협 강도의 차이가 왜 미국 억제정책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이 추가질문에 대해 두 가지 잠정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북한발 위협 강도를 달리하는 처치가 북한발 위협에 관한 응답자의 평가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북한발 위협에 대한 평가가 처치로 인하여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자가 처치와 무관하게 기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설문실험 조사가 기획의도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을 개연성을 암시한다. 둘째, 북한발 위협 강도의 증가가 초래하는 안보 효과를 일반 한국인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발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인식지체 현상으로 인하여 북한발 위협 증가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3.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인과사슬

미국이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을 위하여 활용하는 7가지 수단의 효과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형성하는 인과사슬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응답자에게 가장 선호하는 수단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기술하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실행하는 네 수단(대북 6자회담 추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상정, 대북 선언 정책, 핵사용 시사)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이유를 기술하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세 수단(주한미군 주둔, 연합군 사훈련, 방위동맹 조약, 민주주의나 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맹 강화)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이유를 기술하라고 했다. 텍스트분석은 파이썬의 한국어 자연어 처리 및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텍스트분석의 방법론적 불완전성을 보완하고자 질적 코딩을 함께 실시하였으며, 질적 코딩은 개방형 응답 내 특정 수단에 대한 응답 빈도를 구분하고, 유사한 내용의 답변들끼리 묶어 유형화하였다.

<그림 2> 미국의 대북정책 관련 응답에 포함된 단어의 빈도



<그림 2>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실행하는 네 가지 정책에 대한 개방형 응답문에서 등장한

단어의 빈도를 보여준다. 150회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 중 유의미한 의미가 담긴 단어는 ‘6자회담’, ‘대북’, ‘핵’, ‘정책’, ‘추진’, ‘북한’, ‘사용’, ‘가능성’, ‘결의’, ‘유엔 안보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자 청중비용(6자회담 추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상정)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주된 선정 이유는 ‘외교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신뢰’와 ‘제시된 다른 정책들은 북한의 태도가 오히려 강경해지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림 3>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실행하는 세 가지 정책(주한미군 주둔, 연합군사훈련, 방위동맹 조약, 민주주의나 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맹 강화)에 대한 단어 등장 빈도이다. 150회 이상 언급된 단어는 ‘동맹’, ‘미군’, ‘주둔’, ‘미국’, ‘방위’, ‘조약’, ‘강화’, ‘연합’, ‘군사훈련’ 순으로 나타났다. 즉, ‘주한미군 주둔’, ‘방위조약’, ‘연합군사훈련’ 정책이 자주 언급되었으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신뢰 이유를 밝힌 응답자들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 ‘미군이 주둔한 사실 자체가 북한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 ‘주한미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이 보복을 고려할 수 있음’을 주로 언급했다. 한편 연합군사훈련을 언급한 응답자들은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다른 정책에 비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신뢰가 간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정책을 신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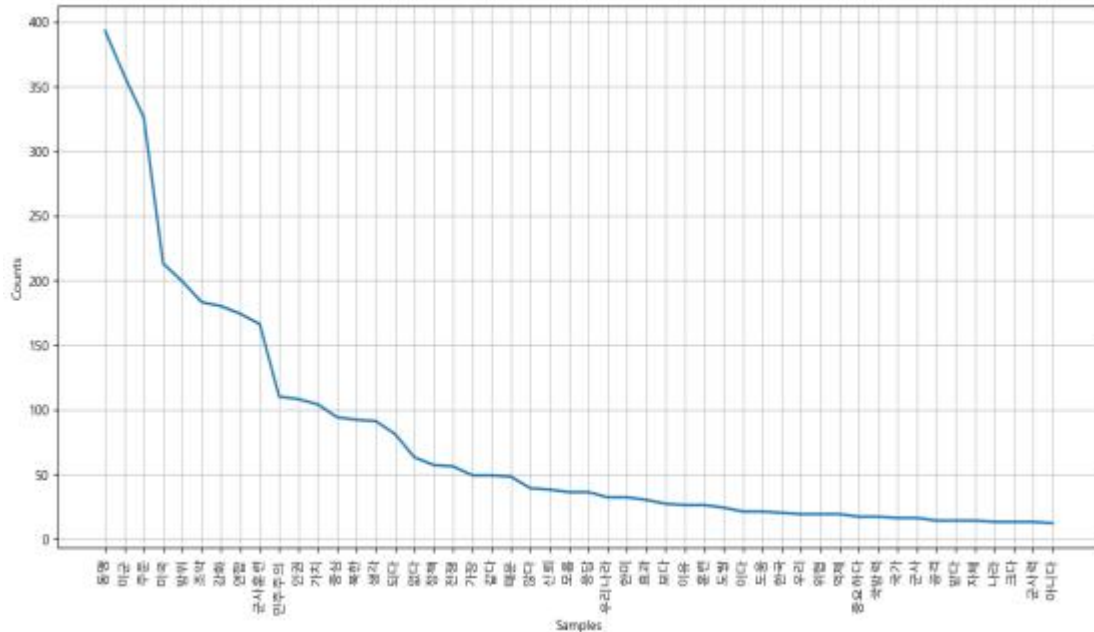
개방형 응답은 한국인의 인식구조 안에 상충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인과사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을 선호하는 인식은 억제의 논리를 포함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매몰비용을 들여서까지 또는 자동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신호가 사전에 보냄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막는다는 인과사슬이 다수 한국인의 인식구조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 인식구조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대북 보복의 인계철선이다. 즉, 유사시 주한미군의 피해가 발생하면 미국이 북한에게 보복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선호한다. 주한미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대북억제로 이어지기보다는 주한미군을 매개로 기대되는 미국의 대규모 개입이 대북억제 효과로 이어진다고 예상한다.

반면, 다자 청중비용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인식구조 안에 대북억제용 수사가 미국의 보복결의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위기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매몰비용으로 북한에게 보복의지를 전달하는 선택이 북한을 오히려 자극한다는 걱정이 있다. 즉, ‘적대적 나선 모형’(hostile spiral thesis)²⁸⁾이 존재한다. 합리성에 기반한 억제의 논리가 한미확장억제에 작동하기보다는 대북억제를 위한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오식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인의 인식 구조에 상충하는 인과사슬이 존재한다는 점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과 관련된 정책 혼선을 설명한다. 국제정치학계 안에서 진행되는 억제론과 나선 모형 간 경쟁이 한국인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면, 대북억제와 대한보장과 관련하여 국민 다수를 모두 만족시키는 조치가 쉽게 만들질 수 없다고 예상하게 된다. 냉전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 내 논쟁과 정책 변화는 한국인의 인식구조로부터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28)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chap. 3; Charles L. Glaser, “Political Consequences of Military Strategy: Expanding and Refining the Spiral and Deterrence Models,” *World Politics* vol.44, no.4(July 1992); Andrew Kydd, “Game Theory and the Spiral Mode,” *World Politics* vol.49, no.3(April 1997).

<그림 3> 단어 등장 빈도 그래프 (동맹정책 선호)



4. 회귀분석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글은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7개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수단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삼고, 응답자의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상황, 정치적 성향을 독립변수로 삼는다. “인과 깔때기”(funnel of causality) 모형에 기반하여,²⁹⁾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이르는 거리가 길다고 가정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이르는 거리가 짧다고 가정한다. 분석모형 1은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만 포함하고, 분석모형 2는 정치적 성향까지 포함한다.

회귀분석 결과를 담은 <표 6>은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첫째, 앞서 기술했던 기술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처치집단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북한발 위협 강도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집단, 낮은 북한발 위협 정보를 받은 집단, 중간 정도의 북한발 위협 정보를 받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는 적대국의 위협이 동맹 결속력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였던 기존 문헌의 흐름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북한발 위협 정도에 관한 정보와 무관하게 이미 응답자가 북한발 위협에 관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했거나, 현실 세계에서 경험되었던 북한발 위협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

둘째, 인구학적 변수를 검토하면, 60대 이상 응답자에 비하여 20-50대 응답자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남억제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열세인 상태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국가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던 냉전 초기 청소년기를 보낸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미국의 안보공약을 높게 평가한다. 반면, 남북한 간 국력이 균형상태이거나 한국의 국력이 우세인 시기 청소년기를 보낸 중년층과 청년층은 미국의 안보공약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다. 각 연령층이 상이한 정치적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체득한

29) A. Campbell,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1960). p.24.

인식이 미국의 안보공약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된다.³⁰⁾

셋째, 사회경제학적 변수는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교육 수준,³¹⁾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종교 등이 모두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 거주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부가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준거집단으로 삼고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대북강경책을 선호하는 응답자와 북핵위협을 높게 평가하는 응답자가 미국의 동맹약속 방식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이하게도 북한에 비하여 한국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는 응답자가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를 보인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약한 피후견국을 포기한 반면, 강한 피후견국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던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의 인식 체계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추정된다.

다섯째, 정치적 성향은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³²⁾ 이 결과는 정치적 성향이 대북인식에 세 경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즉,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선호하고(상관계수=0.218, p -value=0.000), 북핵 위협을 높게 평가하며(상관계수=0.106, p -value=0.001), 군사력에서 대북 열세라고 평가한다(상관계수=-0.104, p -value=0.002). 이처럼 정치적 성향의 효과가 대북 인식과 관련된 세 변수의 효과로 분산되면서, 정치적 성향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편차	p -value	계수	표준편차	p -value
낮은 위협 집단(처치1)	-0.0550	0.0622	0.423	-0.0641	0.0550	0.245
중간 위협 집단(처치2)	0.0320	0.0622	0.608	0.0144	0.0551	0.794
성별	-0.1146	0.0519	0.027	0.0279	0.0478	0.560
22-30대	-0.2438	0.0690	0.000	-0.1739	0.0625	0.005
40-50대	-0.3486	0.0635	0.000	-0.1960	0.0573	0.001

30) 성별이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 1에서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보이는 반면, 정치인식 변수까지 포함된 분석모형 2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 현상은 성별이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대북강경책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며(남성 평균=3.382, 여성평균=3.044, t -계수=4.337, p -value=0.000),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는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과 연관된다(상관계수=0.4211, p -value=0.000). 분석모형 2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효과가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로 인한 효과로 흡수되면서, 성별이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나타난다.

31) 교육이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 1에서 통계학적 유의미성에 근접하는 반면, 정치인식 변수까지 포함된 분석모형 2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 현상은 교육 수준이 북핵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북핵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북핵 위협을 낮게 평가하고(상관계수=-0.042, p -value=0.203), 대북강경책을 선호하지 않고(상관계수=-0.048, p -value=0.148), 북핵위협 인식과 대북강경책 선호가 모두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과 정합관계를 가진다. 이처럼 교육 효과가 두 경로로 분산되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하게 된다.

32) 정치적 이념과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값은 약한 정합관계를 가진다(상관계수=0.0844, p -value=0.011). 즉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을 신뢰하는 약한 경향이 있다.

수입	-0.0003	0.0135	0.985	0.0006	0.0120	0.962
교육	-0.0445	0.0268	0.098	-0.0220	0.0237	0.354
총청	0.0945	0.0953	0.321	0.0467	0.0844	0.580
영호남+	-0.0139	0.0577	0.809	-0.0525	0.0511	0.305
개신교	0.0678	0.0700	0.331	-0.0371	0.0621	0.551
불교	0.1226	0.0726	0.092	0.0408	0.0646	0.528
카톨릭	0.0816	0.0860	0.343	-0.0031	0.0762	0.968
정치성향(진보-보수)				-0.0156	0.0264	0.555
대북강경책(반대-찬성)				0.2434	0.0204	0.000
남북한격차(약-강)				0.0968	0.0219	0.000
북핵위협(낮음-높음)				0.1741	0.0227	0.000
상수	4.0274	0.1512	0.000	2.0027	0.2127	0.000
관측수	관측수		915	관측수		915
	F(12, 902)		4.38	F(16, 898)		20.19
	Prob > F		0.000	Prob > F		0.000
	R-squared		0.0550	R-squared		0.2515

V. 잠정적 결론

이 실험연구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점을 포착했다. 첫째, 다수 한국인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 수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고 믿는다. 7가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수단 가운데 주한미군 유지, 한미연합훈련과 같이 현재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수단을 약속 불이행 시 발생하는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수단보다 선호한다. 현재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긴장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지만, 다수 한국인은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정책 수단을 더 선호한다. 즉, 말보다는 행동을 선호한다고 보여진다. 반면, 약 10-30% 한국인은 강력한 대북억제 신호가 북한을 자극해 오히려 안보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우려한다.

둘째,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수단 가운데 한국인은 미국 내 청중비용보다는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수단을 더 선호한다.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약속을 불이행함으로써 입게 될 피해보다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게 될 피해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분석을 활용하여 인과 메커니즘을 일부 추정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응답자들이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문제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여러 국가행위자의 개입이 북한 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채택하는 정책수단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북한발 위협의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보전문가 사이에는 2017년 이후 북한의 장거리 공격능력의 강화로 인하여 미국이 자국의 피해를 회피하고자 대한방위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지만,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실험연구에서는 북한발 위협 강도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믿음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한국인이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원인을 추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이 채택하는 정책수단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 남북한 군사격차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성향이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 남북한 군사격차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로 분산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된다. 즉, “인과 깔때기”의 초입에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

적 변수가 있고, 중간 부분에서 정치적 성향이 있고, 끝 부분에 대북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의 효과가 대북인식의 효과로 분산 흡수된다고 추정된다.

이 실험설문 연구는 동맹연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피후견국 내 개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보인다. 기존 연구는 후견국이 발송한 신호가 잠재적 적대국의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히 공격이나 분쟁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거나 혹은 동맹에 대한 피후견국의 인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 연구는 후견국의 신호를 수용하는 주체가 국가라는 추상적 행위자가 아닌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억제 맥락 내에서 미국과 북한의 행동 변화에 따라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 내 개인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적대국의 위협이 동맹 내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석수준 간 차이의 가능성을 포착했다. 기존 연구는 적대국 위협은 동맹 연구 내에서 동맹 형성이나 종결의 설명 요인으로서 주로 활용되어왔다. 반면, 이 연구는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가 미국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수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무관할 수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 현상은 세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설명된다고 추정된다. (1)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확장억제를 둘러싼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관계가 즉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의 마음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2) 실험설문연구에서 응답자가 제공된 북한발 위협 수준과 관련된 정보과 무관하게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3) 현실 세계에서 경험된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가 대남억제와 대남보장 수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추후 연구 주제이다.

참고 문헌

- 김 제임스·강충구·함건희.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2022년 5월).
- 나승학.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Stephen M. 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2015), 161-180쪽.
- 소종섭. “노무현 당선자의 대미 발언록,” 『시사저널』 1829호 2003년 11월 2일.
- 우정엽·이성원. “한국 국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 변화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3호 (2015), 41-65쪽.
- 이재준. “6자회담 실패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2021), 69-96쪽.
- 이제훈. “북 ‘극초음속미사일 1000km 표적 명중’…김정은, 1년10개월 만에 참관.” 『한겨레』 2022년 1월 12일.
- 조동준, “북한의 핵능력 증가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주는 함의와 대처방안,” 국가안보전략 제2권 1호(2017), 253-308쪽
- 조동준.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2018), 123-148쪽.
- 조영빈.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 한미동맹 회의론 근거 있다.” 『한국일보』 2021년 8월 19일.
- 조윤영, “미래의 한미동맹과 미국의 역할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8권 1호(2004), 275-293쪽.
- 통일연구원,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1(2007).
- 황대진·양승식. “美, 북한의 ‘LA핵공격’ 감수하면서까지 서울 지키겠다.” 『조선일보』 2017년 8월 1일.
- Campbell A. ,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1960.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Avey. Paul C. "The Historical Rarity of Foreign-Deployed Nuclear Weapon Crises." *Security Studies* vol.27, no.1(January-March, 2018), pp.371-400.
- Bernhardt, Jordan and Lauren Sukin.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Crisis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65, no.5(May, 2021). pp. 855-888.
- de Gaulle, Charles. "Conférence de presse du 14 janvier 1963 (sur l'entrée de la Grande-Bretagne dans la CEE)." Charles de Gaulle-paroles publiques <<https://fresques.ina.fr/de-gaulle/accueil>>].
- Druckman, James N. Donald P. Green, James H. Kuklinski and Arthur Lupia.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00, no.4(November 2006), pp.627-635.
- Fearon, James D., "Signaling versus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ests: An Empirical Test of a Crisis Bargaining Mod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38, no.2(June 1994), pp.236-269.
- Fearon, James D.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 no.1(February, 1997), pp.68-90.
- Fuhrmann, Matthew and Todd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8, no.4(October 2014), pp.919-935
- Glaser, Charles L. "Political Consequences of Military Strategy: Expanding and Refining the Spiral and Deterrence Models." *World Politics* vol.44, no.4(July 1992), pp.497-538.
- Johnson, Jesse C. and Brett Ashley Leeds, "Defense Pacts: A Prescription for Peace?" *Foreign Policy Analysis* vol.7, no.1(January 2011), pp.45-65.
- Johnson, Jesse C. "External Threat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1-3 (May, 2017), pp.736-745.
- Kydd, Andrew. "Game Theory and the Spiral Model." *World Politics* vol.49, no.3(April 1997), pp.371-400.
- Kuo, Raymond and Brian Dylan Blankenship. "Deterrence and Restraint: Do Joint Military Exercises Escal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66, no.1 (January 2022), pp. 3-31.
- Leeds, Brett Ashley. "Do Alliances Deter Aggression? The Influence of Military Alliances on the Initiation of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7, no.3(July 2003), pp.427-439.
- McManus, Roseanne W. and Keren Yarhi-Milo. "The Logic of 'Offstage' Signaling: Domestic Politics, Regime Type, and Major Power-Protégé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71, no.4(April 2017), pp.701-733.
- McManus, Roseanne W, and Mark David Nieman. "Identifying the Level of Major Power Support Signaled for Protégés: A Latent Measure Approa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56, no.3(May 2019), pp.364-378.
- Wright Thorin M. and Toby J. Rider. "Disputed Territory, Defensive Alliances and Conflict Initi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31, no.2(April, 2014), pp.119-144.
- Walt, Stephen M.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39, no.1(March 1997), pp.156-79.

South Koreans' Perception of the Credibility of the US Deterrence toward North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has carried a survey experiment to show that (1) South Koreans evaluate the credibility of US deterrence measures toward North Korea and assurance measures toward South Korea independently from the degree of North Korea's threat level and (2) prefer measures with sunk costs to those with audience costs to deter North Korea's aggression. These findings imply (1) that contrary to the security concern tha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have eroded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 toward South Korea, South Koreans' perception of the US security commitments is not negatively affected by North Korea's threat level and (2) South Koreans trust joint military exercise and the presence of American troops more than verbal commitments.

Keywords: deterrence, assurance, extended deterrence, inter-Korean relationship, signaling theory, survey experiment

19th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1세션: 트럼프 2.0 시대와 한미의 대북 억제력 위기

토론

송승종 (대전대학교)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김인욱 (성균관대학교)

심동현 (전 한미연합사 기획참모차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토론문

토론문: “트럼프 2.0 시대 미국 확장억제 정책 전망”

(대전대 특임교수 송승중)

□ 발제문에 대한 전반적 평가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명확히 앞세워, 국제질서의 ‘근본적 재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정확히 지적
 -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전략적 핵심으로 간주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 엘브리지 콜비를 비롯한 전략가들의 참여로 정책 수립의 전문성·일관성을 확보
 - ➡ 대중국 견제를 위한 장기적 전략 비전의 수립을 추진 중
- 동시에, 주요 의사결정이 국가적 차원의 대전략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 판단과 개인기에 과도히 의존하는 문제점도 적시
 - 특히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통한 패권경쟁에서의 승리(외형상으로는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지 못하도록 거부)를 목표로 삼지만, 이 과정에서 동맹국·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손상시켜, 장기적으로 ‘종합적 손실패’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
- 전반적으로 함형필 박사의 발제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안보전략 전문가로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작되는 국제질서 격변의 조짐, 이것이 동맹정책·확장억제 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핵확산 문제와 관련된 긍정론·부정론 등을 폭넓게 조망하여옴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확장억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 이를 바탕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억제 정책과 관련된 전망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함
- 결론적으로 발제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존의 확장억제 메커니즘이 부분적 보완(NCG, EDSCG, SCM-MCM 등)을 통해,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됨

□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 시대의 도래

- 「파이낸셜타임스(FT)」, “도널드 트럼프의¹⁾ 관세전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²⁾
 - 핵심: 앨버트 허쉬먼(Albert Hirschman)의 통찰력을 활용하여, 트럼프의 관세전략 해독을 시도 → 이것을 경제 논리의 일탈(aberrations)이 아니라 현대 지리경제학(지경학)의 관점에서 보면, “계산된 움직임(calculated moves)”이라고 평가
- FT에 의하면, 트럼프 행동은 무역을 ‘본질적으로 유익하고 비정치적’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케인즈주의나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자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역을 “권력 행사와 강압의 도구”로 간주하는 허쉬먼의 관점과 완벽하게 일치
 - 또한 기사는 허쉬먼의 연구가 나치 독일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자급 자족과 경제적 강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
- 20세기 주류 경제학에서는 허쉬먼의 연구를 거의 무시했지만, 크리스토퍼 클레이튼 등을 비롯한 일군의 경제학자³⁾ 덕분에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음
 - 핵심: 현재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분쟁이 아니라 국가들이 대체 가능성이 낮은 필수부문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함으로써 ‘참여 제약’을 조작하는 전략적 권력투쟁
 - ‘participation constraints’: 권력투사의 핵심 메커니즘. 국가는 순응의 이익(내부 옵션)이 거부(외부 옵션)의 결과보다 클 때만 패권국의 요구를 수용. 강대국은 순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불응시 처벌을 위협함으로써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음
 - 경제관계가 갈수록 ‘무기화’됨에 따라 전통적 동맹체계가 보호·피보호의 가치 사슬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안보 블록으로 변모할 것이며, 중견국들이 패권국에 대항하여 집단적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연합을 구축할 것으로 예측
- 지경학 전문가들의 주장: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제조업을 지배하지는 못하나(중국에 밀렸음), 달러 기반의 세계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는 면에서는 아직 패권적 지위를 유지
 -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한 무역수지 조정이 아니라, 이러한 재정적 의존성을 무기화하여 중국과 같은 경쟁국의 도전을 좌절시키는 동시에,
 - 동맹국들이 미국 시장과 금융구조에 의존하도록 ‘조작’함으로써, 정치적 목표가 경제적 목표를 능가함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로 해석됨

1) Albert Hirschman,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Oakland,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5).

2) Gillian Tett, “How to make sense of Donald Trump’s tariffs,” *Financial Times*, 4 April 2025.

<https://www.ft.com/content/3436cd20-f09f-46dd-9e94-ba10b86de83f>

3) Christopher Clayton and others, “Putting Economics Back Into Geoeconomics,” “Putting Economics Back Into Geoeconomics.” *In preparation for the 2025 NBER Annual Conference on Macroeconomics*, 10-11 Apr 2025.

https://globalcapitalallocation.s3.us-east-2.amazonaws.com/NBER_MacroAnnual_Geoeconomics.pdf

□ 지경학 시대의 의미 1: 앨버트 허쉬먼, 「국가권력과 대외무역의 구조(1945)」

- 핵심: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기초하여 무역의 상호 이익을 강조하는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고전적 경제이론 및 무역개념에 근본적 의문 제기
 - 스미스·리카르도의 낙관적 견해는 국제경제 관계에 내재된 권력의 측면을 간과
 - 허쉬먼에 의하면 A국이 B국보다 무역관계에 훨씬 더 의존하는 비대칭적 상호 의존성이 특징인 국제무역은 정치적 강압과 제국주의적 영향력 행사의 강력한 수단
- 나치 독일에 대한 연구: 어떻게 독일 같은 지배국이 약소국(발트 3국 등)의 자국 의존도를 극대화하고, 자국의 취약성 극소화를 위해 무역구조를 ‘조작’했는지를 규명
 - 비대칭 무역은 정치적 강압과 제국주의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였음을 발견
 - 무역 의존도는 약소국의 정치적 취약성을 조성 → 강대국은 의존도를 이용하여 무역 중단(관세, 금수, 쿼터)을 위협 → 약소국 파트너로부터 정치적 양보를 강요
- 요컨대, 무역은 자율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라 “정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약소국 무역 파트너를 지배할 수 있는 제국주의 모델”로서의 정치적 수단이라는 것임
 - 이는 경제 활동을 권력 정치와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정설과 상충되기 때문에 전후 시대의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해 대체로 무시됨

□ 지경학 시대의 의미 2: 폴 크루그먼, 「지리학과 무역」⁴⁾

-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1991년 전통적 무역이론이 위치·거리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했다고 주장하여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의 기초를 마련
- ‘규모의 경제(단위당 생산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저렴)’ 및 운송비용 증가가 어떻게 특정 지역에 산업·경제활동을 집중시켜, 도시·산업벨트가 형성되는지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
 - 전통적 ‘비교우위론’에 도전 ➡ △ 특정 지역·국가가 특정 산업을 지배하는 이유와 경제지리가 글로벌 무역패턴을 형성하는 방식을 설명, △ 또한 불균등 발전과 지역 격차를 유발하여, 중심-주변을 형성하는 ‘공간(spatial) 경제구조’를 설명
- 크루그먼의 혁신적 모델은 이러한 공간 역학이 국제무역 패턴, 지역 개발, 도시 경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규명함으로써, 지리가 경제적 성과에 근본적으로 중요함을 입증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분석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4) Paul Krugman, *Geography and Trade* (Cambridge, MA: MIT Press, 1991).

□ 지경학의 등장이 국제무역에 주는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글로벌 무역전쟁을 계기로 지경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
 - 경제 상호의존성이 평화·번영을 촉진할 것이라는 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정이 붕괴 ➡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근본적 재구성을 예고
- 세계는 갈수록 무역을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 국가적 회복력, 공급망 안보, 경제적 효율성보다 전략적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시대
 - 관세, 수출통제, 제재 같은 보호주의적 조치가 순수한 경제적 목적보다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위해 명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
- 결국, 국가들은 무역 파트너십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음
 - △ 강압에 취약한 의존도 감소를 위해 핵심 생산을 국내로 이전하고, △ 잠재적 경쟁국들과 연계된 경제 블록으로 재편·통합, △ 경제 도구가 국가 권력의 도구로 공개적으로 사용, △ 더욱 분열되고, 경쟁이 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 환경 등
 - 국가들은 전략적 노출 최소화를 위해 핵심 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데 초점을 맞춘 자급자족·준자급 모델을 선호 ➡ 지정학적 블록으로 분열, 자유주의 무역 종말

□ 지경학의 등장이 동맹체제에 주는 시사점

- 허쉬만·크루그먼 등이 주장하는 지경학의 등장은 전통적 동맹체제의 이해와 기능, 특히 미국 같은 지배적 패권국과 관련된 국제 동맹관계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예고
 - 트럼프 등장이 암시하듯, 한·미동맹은 상호 안보, 공유 가치, 신뢰성 있는 공약 등의 전통적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나 패권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다 명시적인 거래적 합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큼
- 경제적 강압(시장접근 차단 위협, 고율관세 부과, 경제제재 같은 재정적 지배력 활용 등)을 통해 동맹국을 통제하거나, 정치적 또는 안보 문제에 대한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은 건강한 동맹의 기반인 신뢰와 유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킴
 - 이는 한국 같이 대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동맹국에게 심각한 취약성을 야기
 - 이유는 전통적 안보 보장(핵우산 같은)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워지고, 잠재적으로 패권국(미국)의 불평등·일방적 요구에 대한 순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동맹국들의 선택지: △ 협력의 비용·편익 재평가, △ 독자적 역량 개발, △ 국제 파트너십 다각화(“헤징”), △ 패권국 이외의 대안적 아키텍처, △ 전략적 자율성 제고 등

□ 트럼프 2기 행정부 '잠정 국가방위전략 지침(INDSG)'의 시사점

- 핵심: △ 펜타곤의 전략 우선순위는 중국과 미국 본토 방위, △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2023년 4월 발표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
- 미 행정부가 '잠정 지침'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는 2차례 뿐. 202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INSSG)', 그리고 이번의 INDSG
- 2021 INSSG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안정에 필수적인 "핵심 동맹국"으로 묘사했으나, 이번에는 한국이 완전히 제외됨 →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하향 조정
- 2025 INDSG는 우리에게 "한국 문제는 한국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
 -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국이 북한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라"고 통보
 -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북핵 문제를 사활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
- 이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대만을 유사시 미국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방어선에서 제외시키는 '애치슨 라인 2.0'을 선언했음을 인식해야 함

□ 미국 확장억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

- '핵우산'은 1953년 미국의 압도적 핵전력 우세(미국: 2천발, 소련: 100여발)를 바탕으로 등장
 - 목적: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핵무기로 상쇄시키고, 동맹국을 안심시켜 핵개발 방지
- '핵우산'의 전제조건은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 그러나 북한은 핵전력 고도화로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보유(ICBM, SLBM 등)한 것으로 평가
- 핵억제는 냉전시기 미국·소련의 핵 양극체제에서 등장 → 지금은 중국의 대대적 핵무기 확장으로 핵 3극체제에 진입 → 3극체제에서는 상호공멸·동등성(parity) 개념이 작동 불가
 - ※ 결론적으로, 중국 핵전력이 가세된 현시점에서 과거 방식의 핵우산·확장억제는 불가능
- 무엇보다 핵억제의 3대 요소는 능력·의사소통·신뢰성(credibility)의 3C
 - 다만 3C는 억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의지'가 포함되어야 충분조건이 달성
 - 이해타산을 따지는 트럼프가 미국 대도시의 대량살상을 각오하고 동맹국을 위해 핵보복에 나서려는 '의지'를 가질 것으로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가?
- 결론적으로, 미국은 미 본토가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동맹국을 위해 핵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없음. 추가로, 미국은 히로시마·나카사키 원폭 투하의 원죄를 지금도 인식함

□ 발제문에 대한 추가적 코멘트 및 질문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무역전쟁과 지경학과의 밀접한 연관성, 이것이 국제무역과 동맹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잠정 국가방위전략 지침(INDSG)의 의미, “한국 문제는 한국이 해결”하라는 메시지 등을 고려하면, 발제문의 한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남
※ 최대 문제 ⇨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일한 관점에 머물러 있는 점
- 발표자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태지역 동맹국과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 오해일 가능성이 큼
 -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부과는 동맹국·적대국의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
 - 이는 안보공약-경제압박이 분리되어 작동한다는 전통적 가정의 붕괴를 의미
 - 지경학 시대에 비대칭적 무역은 정치적 강압과 제국주의적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기능
- 특히 심각한 것은 INDSG에서 한국을 미국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방어선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억제 공약이 ‘별일 없이 작동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
-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의 핵보유 방지 기조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이는 지경학적 현실과 괴리된 낙관적 분석
- 발제문은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미국 주도의 협의체 (NCG, EDSCG 등)만 언급 ➡ 이는 현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임
 -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에 핵무기 통제 권한 부여 등 논의 가능” 표현은 부적절
- 질문1: 트럼프의 이해타산적·거래주의적 세계관이 “본토가 핵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국 국민의 대량학살을 각오하고, 동맹국을 위해 핵보복을 감행할 것”이라는 핵 확장억제의 자기희생적·이타적 공약과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질문2: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무기화된 세계에서 동맹은 더 이상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결속체가 아니라, 패권국의 강압적 도구로 전략할 위험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안보 환경의 지각 변동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 끝 ///

MEMO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In the bottom-left corner, there is a small blue triangle pointing towards the center of the page, resembling a staple or a piece of tape. The overall appearance is that of a clean, unused sheet of notebook paper.

MEMO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In the bottom-left corner, there is a small blue triangle pointing towards the center of the page, resembling a staple or a piece of tape. The overall appearance is that of a clean, unused sheet of stationery.

토론문 (1세션 제4발제)

2025. 4. 10.(목) / 서울대

심동현 前 한미연합사 기획참모차장 (예비역 육군 준장)

안녕하십니까, 심동현입니다. 이런 중요한 세미나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며, 오늘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주로 담당했던 역할은 작전기획관(Planner)이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참, 한미연합사, 야전부대 등에서 각종 작전계획과 북핵대비 정책전략,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계획 등을 수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조동준 교수님과 홍예림 선생님의 신호이론(signaling theory) 기반 실험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론과 현실을 정교하게 연결한 인상 깊은 발표였습니다. 특히 국민 인식 변화의 메커니즘을 실험적 방법론을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한 점에서 학술적 의미는 물론, 정책 실무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발표에서 확인된 두 가지 핵심 결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 북한 위협이 저강도/중강도일 경우, 위협의 강도 변화보다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수준이 한국 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 여부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의 존재가 핵무장 여론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보호 의지가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여부가 국민 여론을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말보다 행동’, 즉 매몰비용 신호(sunk cost signal) - 예컨대 주한미군주둔, 한미연합훈련 같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동 기반의 신호가 단순한 언어나 외교적 수사보다 더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동한다는 결과는, 우리가 신뢰 기반의 억제 전략을 설계할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단지 이론적 가설 검증에 머물지 않고, 최근 국제 현실에서도 뚜렷하게 입증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공감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나토 가입’과 ‘유사시 미국 및 나토의 군사적 개입’이라는 강력한 확장억제 신호를 기대했지만, 전쟁 발발 이전까지 그 신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외교적성명과 경제제재 같은 청중비용신호(audience cost signals)는 제공했으나,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선제적 군사조치는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푸틴은 서방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침공을 감행했으며, 확장억제는 사전적 억제력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대규모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대응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사후적 실효 조치(post-hoc sunk cost signal)는 전쟁지속능력 확보에는 기여하지만, 선제적 억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오늘 발표의 분석 결과와 정합성을 가지며, 동시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정책적 메시지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례입니다. 즉, 국민의 안보 신뢰는 단순한 언어나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동반된 신호를 통해 형성되며, 결국은 우리나라 스스로의 준비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조동준 교수님 발제의 높은 학술적 성과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두 가지 보완적 시각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험에서 일정한 북한 저/중강도 위협을 전제로 신호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했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북한 고강도 위협 또는 위협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임박한가에 따라서 동일한 신호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북한이 전술핵 실전배치, ICBM 도발, 핵 EMP 위협 등을 할 때와 북한이 잠정적으로 핵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할 때와는 매우 상이한 국민의 인식을 유발할

수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고강도를 포함한 위협의 강도를 독립변수로 도입해 확장억제 신뢰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다면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둘째, 실험 시기인 2022년 이후에 몇 번의 전국단위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의 정치 성향, 연령, 성별, 지역별로 안보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예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질적인 하위 집단 간 차이는 정책 설계에서 좀더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예컨대 보수층과 진보층, 20대와 60대, 여성과 남성은 확장억제 신뢰도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부와 그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별 반응 차이와 경향성을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 타깃팅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주신다면, 실험의 정책적 활용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완적 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는 국민 인식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질적 신뢰는 실제 행동을 수반하는 신호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동맹정책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Two Track 전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Track-1은 정부의 영역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되, 핵무장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동맹 신뢰와 국제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공동대응 시, 전력 운용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실질적 발언권과 참여권 확보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즉, 미국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대응 구도의 실질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Track-2는 민간 영역입니다. 정부가 외교적·정치적 파장과 민감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제한되는 전략적 영역을 학계, 전문가,

민간 싱크탱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본의 사례처럼 ‘NPT체제 내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 핵기술 인프라 구축 가능성,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NPT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는 정당성과 논리’ 등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안과 추진 로드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필요 시 Track-1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핵전략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성향,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치밀하고 조용하게 다양한 옵션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핵안보 전략**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장억제에서 말뿐인 신호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리고 후견국이 피후견국의 기대만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조동준 교수님의 발표는 그러한 국제 질서의 변동 속에서도, 국민 인식 구조가 어떠한 조건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책적 실천 전략을 더해, 우리 안보 전략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보완하자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저의 **마무리 멘트**입니다. “**확장억제 공약은 신뢰의 기반 위에서 출발하지만, 실질적인 억제력은 준비된 자에게만 작동합니다.**”
감사합니다.